

전북은행 ‘캄보디아 사태’ 후 반 년째 대책 없이 수수방관

지난해 프린스·후이원 거래 다수
프린스·에치이·자전북은행 ‘절반’ 7억
후속대책 없어 지역사회 비판 확산
이 대통령 전담반 지사·수사 가속

지난해 캄보디아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납치, 감금, 살인, 보이스피싱, 금융 범죄가 급증하면서 사회문제가 된 가운데 전북은행이 이들 은행간 거래를 가장 많이 한 것으로 나타나 큰 충격을 안겼

그러나 전북은행은 일련의 사태가 발생한지 반 년이 흘렀지만 지구책이나 별 다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수수방관하고 있어 금융권은 물론 지역사회의 거센 비난을 사고 있다.

직접 범죄단지를 운영해온 캄보디아 프린스 그룹과 금융 거래를 해 온 국내 은행은 5곳으로 금융거래액은 총 2146억 8천600만원에 달했는데 전북은행이 다

수를 차지했다.

강민국 국회의원실(국민의힘)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국내 금융업권 캄보디아 프린스 및 후이원그룹 거래 내역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말까지 5개 은행이 프린스그룹과, 1개 은행이 후이원 그룹과 각각 금융거래가 있었던 것으로 집계됐다.

국내 5개 국내 은행 가운데는 전북 향토은행인 전북은행이 거래 건수 51건, 거래 금액 총 1천252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프린스 그룹이 정기성예금을 예치한 국민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등의 순이다.

특히 해외송금 IM뱅크를 제외한 4개 은행이 프린스 그룹에게 예치한 예금에 지급한 이자는 무려 14억5천400만원에 달했는데 전북은행이 7억870만원으로 가장 많았다.

지난해 9월 기준 프린스 그룹이 예치한 예금이 남아있는 은행은 4곳으로 국민은행, 전북은행 등이다.

범죄 조직자금을 세탁하며 회사를 키운 후이원 그룹과 금융거래를 한 은행도 전북은행으로 집계되는 등 도적적 해이가 극에 달했다는 평가다.

당시 강민국 국회의원실 의원은 “프린스 그룹의 검은 돈에 국내 은행들이 이자를 주고 있었는데 이자가 14억 5천만원에 달한다”며 “특히 범죄 조직을 세우고 회사를 키운 후이원 그룹과 금융거래한 국내 은행이 확인됐는데, 전북은행이었고 2018년 8월에 개설한 당좌 예금도 있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전북은행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캄보디아 사태와 관련, 아직 은행차원의 후속대책이나 지시사항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캄보디아 스캔사태 등과 관련, 전담반을 꾸려 발본색원의 지시를 내린만큼 향후 수사결과에 귀추가 쏠리고 있다.

/장정철 기자



혁신도시 악취 해법
도·전주·김제·완주 ‘공동 대응’
전북도는 21일 도청에서 김관영 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악취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사진=완주군>

도·3개 시군, 혁신도시 악취 해결 행정경계 넘어 ‘한뜻’

전북도·전주시·김제시·완주군
340억 중 지방비 102억 분담 협약
김제 용지면 축사매입·철거 추진
‘복합악취 절반 감소’ 1단계 연장선

혁신도시의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특별자치도와 인근 3개 시군이 힘을 모았다.

행정구역의 벽을 허무는 한편 사업대상 지역과 인근 지역이 공동 재원분담에 나선 이번 협력은 전국에서도 유례를 찾기 어려운 상생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도는 21일 도청 4층 회의실에서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와 우범기 전주시장, 정성주 김제시장, 유희태 완주군수가 참석한 가운데 혁신도시 악취해결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사업 대상지역인 김제시와 혁신도시가 위치한 전주시, 완주군이 함께 재원을 부담하는 방식으로, 지역 환경 현안에 공동 대응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협약의 골자는 김제시 용지면 특별

관리지역에 남아있는 현업축사 27농가를 매입·철거하는 사업의 지방비 분담이다.

총사업비 340억 원 가운데 국비 238억 원(70%)을 제외한 지방비 102억 원을 전북자치도 30%, 김제시 50%, 전주시와 완주군이 각 10%씩 나눠 부담한다. 사업 기간은 2026년부터 2029년까지 4년이며, 토지매입비 244억 원과 축사철거비 96억 원으로 구성된다.

이번 협약에 따라 전북자치도는 협약기관 간 협의·조정과 국비 확보를 위한 중앙부처 건의, 사업 추진성과 점검 및 평가를 맡는다. 김제시는 사업 시행과 추진상황 보고, 악취배출시설 관리 강화 및 악취저감대책 추진을 담당한다. 전주시와 완주군은 지방비 분담과 함께 악취저감 관련 연계사업에 협력한다.

이번 사업은 2022년 시작된 1단계 매입사업의 연장선에 있다. 당시 환경부는 국비 481억 원을 투입해 용지면 특별관리지역 내 53농가 중 26농가를 매입 완료했다. 나머지 27농가는 새만

금사업법 개정으로 매입 기한이 4년 연장되면서 2단계 사업으로 추진하게 됐다. 대상 지역은 신암, 신흥, 비룡마을 일원으로, 축사 부지 8만 9,238㎡와 축사 건물 3만 8,679㎡가 철거 대상이다.

1단계 사업 추진 결과 악취 저감 효과가 나타났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조사에 따르면 용지면 일대 복합악취 농도는 2021년 15.8배에서 2025년 8.0배로 약 50% 줄었다.

그러나 연평균 20건 이상의 민원이 여전히 발생하는 등 혁신도시 주민들의 불편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황이다. 잔여 축사 전량 매입이 완료돼야 근본적인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전북도의 판단이다.

도는 축사 매입과 함께 종합적인 악취 관리 대책도 추진한다.

올해 용지면 일대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해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 축사와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장정철 기자

李대통령 “이혜훈 해명 들어보야...아직 결정 못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 시사
“국민 판단 듣고 결정하고 싶었다
청문회 봉쇄돼 아쉽다” 보이콧 직격
“한쪽 주장만으론 판단 어려워”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와 관련, “본인 해명을 들어보야 한다”며 인사청문회를 통해 의견을 들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의 이같은 입장은 무산된 이혜훈 기획예산처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이를 위해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재송부를 요구하겠다는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후보자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아직 결정하지 못했



이혜훈 후보자

다. 문제가 있어 보이긴 하다. 저로서도 아쉽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아쉬운 건 본인 얘기를 공개적으로 들어볼 기회를 갖고, 청문 과정을 본 우리 국민들의 판단을 들어보고 결정하고 싶었다”며 “그 기회마저 봉쇄돼서 본인도 아쉽겠지만 저도 참 아쉽다”며 청문회 보이콧을 직격했다.

이어 “재판을 하다보면 원고측 유능한 대리인이 써놓은 거 읽어보면 백프로 그 사람 말이 맞고, 피고측 유능한 대리인 말을 봐도 백프로 맞다”며 “그래서 두 사람 이야기를 다 들어보면 판단이 선

다”며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쪽 이야기만 듣고 판단하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는 저 자신에 관한 왜곡된 가짜 이야기를 많이 들어 봐서 그런 신념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청와대의 인사검증 부실’에 대해서 “그분이 보좌관에게 갑질을 한걸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나”면서 “유능한 분이라고 판단되고 그쪽 진영에서 공천을 무려 다섯 번을 받아서 세 번이나 당선되고 아무런 문제도 제기되지 않았던 분 아니냐”고 국민의힘을 직격했다.

이 대통령은 이같은 입장에 따라 이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실제 열리게 될지와 인사청문회가 무산된다면 임명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K-컬처 연계 ‘문화올림픽’ 유치 전략 시동

하계올림픽 유치 전략회의 개최
문화분야 전문가 7인 라운드테이블
전북 고유 자원 결합해 폐회식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 등 제안

전북특별자치도는 21일 전주하계올림픽·패럴림픽 유치를 위한 문화분야 전략마련의 일환으로 전주하계올림픽 유치 라운드테이블 전문가 첫 번째 회의(문화분야)를 열었다. 21일 도에 따르면 이번 회의는 전주시 완산구에 위치한 청동북카페에서 열렸으며 도내 문화기획자 등 문화분야 전문가 7명이 참석, ‘문화올림픽’ 실현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논의를 벌였다.

회의에는 김성혁, 김지훈, 박영준, 안선우, 이광수, 이윤주, 이재원 등 문화분야 전문가가 참여해, 전북의 문화적 강

점과 K-컬처를 연계한 올림픽 문화콘텐츠 전략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2036 전주하계올림픽·패럴림픽 유치 추진상황을 공유하고 대회의 비전과 컨셉, 현재까지의 유치 추진 경과, 향후 유치 전략 등에 대한 설명이 이뤄졌으며 이어 K-컬처 연계 문화올림픽 개최방안을 주제로 논의사항별 집중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전문가들은 ▲전북 고유의 문화 자산과 K-컬처를 결합한 올림픽 개·폐회식 연출 방안 ▲대회 기간 전북 전역에서 펼쳐질 문화행사 및 문화관광 연계 프로그램 ▲‘문화올림픽’ 실현을 위한 전북도 및 정부 차원의 준비과제 등에 대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또 문화예술을 통한 지역 정체성 강화, 지역 문화예술인의 참여 확대, 올림픽 이후에도 지속 가능한 문화유산 창



도는 21일 전주올림픽·패럴림픽 유치 라운드테이블 문화분야 전문가 첫 번째 회의를 열고 추진상황을 공유했다.

출 방안 등도 주요 논의 주제로 다뤄졌다.

전북도 관계자는 “이번 문화분야 전문가 라운드테이블은 전북이 지향하는 ‘K-컬처 기반 문화올림픽’의 방향성을

<사진=전북도>

구체화하는 의미 있는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분야별 전문가 논의를 지속적 으로 확대해 전북만의 차별화된 올림픽 유치 전략을 완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장정철 기자

김종훈 부지사, 설 앞두고 전북도 서울장학숙 현장 점검

전기·소방 등 설비 운영 상태 확인
급식 위생관리·식단 균형 점검
청운관 입사생 환경 살피고 격려

전북도는 김종훈 경제부지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전북특별자치도 서울장학숙을 방문, 주요 시설물과 입사생 급식 상태를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명절 기간을 앞두고 장학숙의 전반적인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입사생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현장 관리 수준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김 부지사는 장학숙 건물의 구조적 안전성과 주요 시설물의 유지관리 상태를 확인하고, 전기·기계·소방·통신 등 각종 설비의 운영 상태를 점검했다. 특히 중대재해와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이행 여부와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황, 위기 발생 시 대응 매뉴얼 등을 꼼꼼히 살폈다.

이어 급식시설을 찾아 위생 관리 상태와 식단 구성의 영양 균형을 점검하며, 학생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급식 관리에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아울러 국가고시와 국가전문자격시험을 준비 중인 청운관 입사생들을 만나 면학 환경을 살피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서울장학숙은 현재 도내 출신 대학생과 수험생들이 생활하며 학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는 전북특별자치도의 대표적인 인재 육성 지원 시설로, 안정적인 주거 환경과 급식 제공을 통해 학생들의 수도권 생활을 뒷받침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번 현장점검 결과를 토대로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을 종합 검토해 향후 시설 관리와 운영 개선에 반영하고, 장학숙의 시설 환경과 운영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입사생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힘을 기울인다.

김종훈 부지사는 이날 “서울장학숙은 도내 학생들이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



전북도는 설 명절을 앞두고 서울 서초 전북자치도 서울장학숙을 방문해 주요 시설과 입사생 급식 상태를 점검했다고 21일 밝혔다.

<사진=전북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중요한 공간”이라며 “시설 안전과 급식 관리의 학생들의 일상과 직결되는 만큼, 예방 중심의 관리와 세심한 점검으로 안전사고 예방과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민주당 전북도당, 지방선거 예비후보 자격심사 접수

출마희망자 관리당원 한해 신청
심사 없이 등록 땀 공천 불이익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은 제9회 전국지방동시지방선거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서류 접수를 받는다.

이번 접수는 지난 19일 선출직평가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른 후속절차로 서류 접수는 23일부터 31일까지이며 기초단체장, 광역의원(비례포함), 기초의원(비례포함) 희망자 대상이다.

접수대상자는 오는 6월 예정된 전국 동시지방선거 출마를 희망하는 현재 시정 관리당원이다.

신청자격은 공직선거법상의 피선거권이 있고 지난 2022년 6월 1일부터 현재까지 당내 교육 16시간을 이수해야만 가능하다.

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적격 판정을 받은 출마 예정자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예비후보자로 등록 후 선거 운동이 가능하다.

만약 더불어민주당적을 갖고 출마하

려는 후보자가 도당 예비후보자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지 않고 선관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할 경우, 향후 예정된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 공천심사에서 배제되거나 당규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수 있다.

전북도당 관계자는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발표 이후 탈당 출마 할 경우 영구복당 불허(당헌 제4조 3항 2호) 대상이 된다”며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장정철 기자

윤준병, ‘맹견 사육허가 개선법’ 대표 발의

기질평가 비용 지원 근거 신설
부정 사육허가 처벌 엄정성 강화

윤준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맹견 사육허가 제도의 현장 불합리를 개선하고 동물 보호와 공공 안전을 조화롭게 강화하기 위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명 ‘맹견 사육허가 개선법’을 지난 19일 대표 발의했다.

윤 의원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개물림 사고 예방을 위해 특정 견종을 맹견으로 지정하고, 맹견을 사육하려는 경우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고령이나 질병 등의 사유로 중성화 수술이나 기질평가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에도 예외 없이 이를 요구하고, 기질평가 비용 역시 전액 소유자 부담으로 하면서 제도에 대한 반발과



윤준병 의원

현장 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며 이같은 법안 발의 배경을 밝혔다.

특히 맹견 사육허가 권한이 시·도지사에게 집중돼 있어, 일부 지역에서는 허가를 받기 위해 맹견과 함께 장거리 이동을 해야 하는 불편이 발생하는 등 행정 접근성 문제도 드러나고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맹견 사육허가 제도의 실효성과 현실성을 동시에 높이하고자 했다. 개정안은 △고령·질병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중성화 수술 및 기질평가에 대한

예외 규정을 신설하고, △일부 맹견에 대해서는 기질평가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보호자의 과도한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또한 △맹견 사육허가 권한을 시·도지사에서 시장·군수·구청장으로 조정해 주민 생활권 중심의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사육허가를 받거나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을 신설해 제도의 엄정함과 신뢰성을 강화했다.

윤 의원은 “책임 있는 보호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기 위한 제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장의 불합리를 방지한 채 규제만 강화하는 방식으로 는 실질적인 사고 예방 효과를 거두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안호영 “남원 KAIST AI공공의료캠퍼스대 유치”

“세계 최초 AI공공의료
연구모델 구축할 것”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1일 추진중인 남원공공의대를 KAIST와 결합한 AI공공의대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안 의원은 이날 전북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KAIST를 중심으로 세계 최초의 AI공공의료 연구모델을 전북 남원에 구축하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남원 공공의과대학을 기반으로, KAIST의 연구 역량을 결합해 AI를 공공의료 체계의 기본 인프라로 연구·실증하는 국가 연구 거점을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의료AI, 의과학, 의료데이터, 공공의료 시스템을 통합 연구하고, 공공의료 현장에서 직접 검증하는 연구 중심 캠퍼스가 핵심이다.

안 의원은 “이 구상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하는 ‘AI 기본의료’ 국정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는 프로젝트”라며 “AI 기본의료는 지역과 소득에 관계없이 누구나 양질의 의료를 누릴리도록, AI를 공공의료 전반에 적용하는 국가 전략”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KAIST 남원 캠퍼스는 AI 기본의료를 연구 단계부터 현장 실증까지 완성하는 핵심 거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 공공의대가 임상과 교육을 담당하고, KAIST 남원 AI공공의료 캠퍼스는 AI 기반 의료 연구와 의료 시스템 설계를 맡아, 현장의 문제를 연구로 연결하고 연구 성과를 다시 공공의료 현장에서 검증하는 구조를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안 의원은 “KAIST 남원 AI공공의



안호영 의원은 도의회에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공공의대를 KAIST와 결합한 AI공공의대로 유치하겠다”고 밝혔다.

료캠퍼스는 공공의료의 미래를 연구로 설계하는 연구 캠퍼스”라며 “AI를 개별 기술이 아닌 의료 시스템 전체의 구조로 연구하는 점에서 세계 최초의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KAIST 남원 AI공공의료캠퍼스는 의료 AI 연구기관, 스타트업, 기업 연구소가 함께 상주하는 연구·창업 복합형 캠퍼스로 조성된다. 이를 통해 AI 정밀 일차의료, 역학 감시, 정신건강·돌봄 AI 등 연구 성과가 사업화와 산업으로 연결되는 구조를 만들고, 양질의 일차의료와 지역 산업 성장을 함께 이끈다는 구상이다.

안 의원은 또 “덕유산·지리산 권역을 중심으로 한 동부권은 의료·돌봄 산업과 건강·휴양·관광 산업이 결합될 수 있는 잠재력이 큰 지역”이라며 “남원을 중심으로 한 KAIST 캠퍼스와 공공의대가 동부권 전체 경제를 살리는 도약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안 의원은 “전북에서 연구되고 현장에서 검증된 AI 의료 모델을 국가 표준으로 정리해 산업과 수출로 연결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영목기자

부안군 공고 제2026-165호

부안군 성장관리계획(안) 주민의견청취 열람 공고

부안군 성장관리계획구역 및 계획(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5조의2, 제7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의13, 제70조의14,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주민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의견이 있으신 분은 열람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월 22일

부 안 군 수

1. 주요내용

- 가.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 및 성장관리계획 수립 목적
- 개발압력이 높아지는 지역의 여건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적정 기반시설 확충 및 개별 건축 행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함으로써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비시가화지역의 합리적 발전과 능률적 관리를 위해 지역사회의 미래성장방향을 예측하여 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

나. 성장관리계획구역 지정(안)

구분	개소(개)	면적(㎡)	구성비(%)
총계	398	88,557,003	100.0
	일반형	85,054,536	96.1
	주거형	1,590,724	1.8
	복합형	453,783	0.5
유도형	산입형	1,457,990	1.6

다. 성장관리계획 수립(안)

- 기반시설 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 계획에 관한 사항
- 건축물의 배치·형태·색채 계획에 관한 사항
- 환경관리 및 재해방지계획,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등

2. 열람기간 및 의견제출 방법

-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 2026. 1. 23.(금) ~ 2026. 2. 5.(목)
- 의견 제출 방법 : 열람기간 내 열람장소에 비치된 주민의견서 작성 후 제출

3. 열람 및 의견제출 장소

-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부안군 부안읍 당산로 91)

4. 관계도서

- 게재 생략(열람 장소에 비치)

5. 기타 사항

- 열람 자료는 최종 결정 고시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안군청 새만금도시과 도시계획팀(☎063-580-470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ociety

사회

3

전주덕진공원, 1단계 기반정비 완료…중·장기 시작

상징적 진입 공간 열린광장 전통 현대 재해석 창포원 등

전주시가 도심 속 대표 호수공원인 덕진공원을 시민들이 더 넓고 더 편하게 즐길 수 있도록 주요 기반 정비를 완료한 데 이어 중·장기 확장계획을 시작키로 했다.

전주시는 지난 2020년부터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을 추진해 △열린광장 △창포원 조성을 포함한 총 10개 사업을 완료했으며, 올해부터 정비사업과 병행해 중·장기 기반 조성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마무리된 사업은 '덕진공원 대표관광지 육성사업 기본계획'에 따른 1단계 사

업으로, 열린광장 조성까지를 포함한 주요 기반 정비를 담고 있다.

시는 지난해 마무리된 열린광장 및 창포원 조성은 덕진공원이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머물고 즐길 수 있는 열린 공간으로 기능을 확대하는 데 기여했다. 열린광장은 상징적 진입 공간이자 만남의 장소로, 창포원은 전통 친수공간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공간으로 자리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올해 덕진공원의 기본 기능을 더욱 강화하는 정비사업을 이어갈 계획이다. 올해 공원 전반의 산책로 정비를 통해 보행 안정성과 이용 편의를 개선하고, 호수의 수질 개선 사업을 병행 추진해 쾌적한 수변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오랜 시간 자리를 지켜온 풍월정도 전

통정자가 지닌 멋을 살리는 방향으로 재단장에 수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휴식 명소로 새롭게 정비키로 했다.

또한, 덕진공원 종합계획에 따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공원 이용 환경을 확장해 나갈 방침이다. 이를 위해 시는 공원 서측의 현재 고물상 부지를 지난해 매입을 완료했으며, 해당부지를 활용한 주차타워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방문객 주차 수요에 대응하고 공원 이용 편의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덕진공원과 인접한 덕암마을 일대는 공원과 연계한 관광특화단지로 육성하고, 체험·문화·휴식 기능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장기적으로 발전시켜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를 통해 덕진공원과 덕암마을을 연계한 '덕진공원 단독 관광코스'를

만들어 갈 계획이다.

시는 공원과 마을을 잇는 보행 동선과 공간 구조를 정비하고, 저층·소규모 활용이 가능한 환경을 조성해 음식과 차, 숙박 등 관광 관련 민간 콘텐츠가 자연스럽게 유입될 수 있도록 중·장기적으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시는 이러한 중·장기 계획을 통해 덕진공원을 시민의 일상 속 휴식공간이자 전주를 대표하는 호수공원으로 지속적으로 가꿔 나간다는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덕진공원은 단계적으로 변화해온 공간이며, 앞으로의 변화가 더욱 기대되는 곳"이라며 "시민과 관광객 모두가 편안하게 찾을 수 있는 전주의 대표공원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이전…임대서비스 대폭 강화

중인동 인근에 신축 이전 영농비 절감 기대

전주시는 농업인의 영농 편의 증진과 농번기 농기계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중인동 인근에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신축 이전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시는 북부권 농업인의 농기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를 소규모 창고를 임대해 운영해 왔으나, 시설이 협소하여 농업기계 보관과 정비에 어려움을 겪었다. 또 농번기에 집중되는 임대 수요 증가로 이용 불

편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이에 시는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농업기계 임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분소 이전과 함께 신축을 결정했다.

이번에 신축되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는 완산구 중인동에 총 29억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연면적 657㎡ / 지상 1층 규모로 건립될 예정이다. 시는 분소가 완공되면 농업기계 보관창고와 정비실, 사무공간 등을 갖춰 기존 임차 시설에서 발생했던 공간 부족 문제를 크게 해소할 것으로 기대했다.

또 농업기계 관리 여건이 개선될뿐 아

니라, 임대 기종의 다양화로 임대 대기간 단축과 신속한 정비 대응이 가능해져 농업인의 만족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특히 농번기 집중되는 임대 수요를 효율적으로 분산해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했다.

시는 이번 사업을 통해 고가의 농업기계 구입 부담을 줄이고, 소규모·고령 농가의 영농 활동을 적극 지원하기 위해 추진 과정에서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는 한편, 안전한 농업기계 이용을 위한 교육과 관리도 병행할 예정이다.

강세권 전주시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농업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신축 이전은 농업인의 현장 목소리를 반영한 생활 밀착형 농정 사업"이라며, "보다 안전하고 효율적인 농업기계 임대 서비스를 제공 등 앞으로도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현장 중심의 농업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전주시는 26년 5월 준공을 목표로 분소 신축 이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준공 이후 시범 운영을 거쳐 본격적인 임대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2026년 상병수당 운영…시민 부담 경감

상병수당 지역협의체 위원 추가 위촉

전주시는 질병이나 부상으로 근로가 어려운 시민의 소득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상병수당 운영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상병수당은 근로자가 업무 외 질병·부상으로 치료와 회복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득을 지원해 '아프면 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는 사회보장 제도다.

시는 그간 제도 운영 경험을 토대로 안정적인 제도 정착을 추진해 왔다.

구체적으로 시는 지난해만 총 857건, 9억8500여원을 상병수당으로 지급했다. 이는 3단계 시범사업 운영 중인 4개 시·군(전주시,원주시,충주시,홍성군) 가운데 가장 높은 42.8%의 지급률을 기록해 제도의 실효성을 입증했다.

이는 치료 기간 중 소득 단절로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와 자영업자의 경제적 부

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치료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조기 회복과 건강권 보호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시는 올해도 상병수당 운영을 통해 △저소득 근로자 및 취약 노동계층 보호 △질병 악화 방지 및 조기 회복 지원 △지역 내 사회안정망 강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또 상병수당 제도의 전문성과 현장성 강화를 위해 상병수당 지역협의체 위원

을 추가 위촉해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자문 기능을 확대하고, 시민 체감도를 높일 방침이다.

전주시 관계자는 "상병수당은 시민의 삶의 질과 직결되는 중요한 제도"라며, "앞으로도 시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고 많은 시민들이 상병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차질없이 운영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계획 수립 여부·콘크리트 동해 및 구조물 붕괴 방지 등 확인

전주시가 동절기 건설현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현장점검에 나섰다.

전주시는 21일 김성수 건설안전국장을 비롯해 재난안전과장, 건축과장 등이 동참한 합동점검반을 꾸려 대규모 건설공

사가 진행되는 현장을 찾아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이날 안전점검은 갑작스럽게 기온이 떨어지는 동절기에 자칫 안전수칙을 소홀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진행됐다.

안전점검은 대규모 공사가 진행 중인 덕진구 소재의 예곡시터 한양수자인 건설 현장(덕진구 송천동2가 1315번지 일

대), 전북대학교 5차 생활관 건설 현장(덕진구 금암동 663번지 일대) 등 2곳을 대상으로 추진했다.

합동점검반은 △동절기 대비 안전 관리계획 수립 여부 △콘크리트 동해 및 구조물 붕괴 방지 △폭설/강풍 대비 △지반침하 및 균열 상태 △화재 예방 등 안전수칙 준수 여부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태 등 기본적인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확인했다.

김성수 건설안전국장은 "동절기 기온 변화로 지반이 약해져 자칫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주변을 꼼꼼히 확인하여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현장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안전사고 없는 건설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

/정소민 기자

전북환경청, 유관기관 합동 야생동물 불법엽구 수거 행사 실시

21일 남원시 일원에서 울무·뿔 등 불법 사냥도구 수거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1월 21일 남원시 산내면 일대에서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에는 전북지방환경청, 남원시청, 지리산국립공원 전북사무소, (사)야생생물관리협회 전북지부 등 유관기관 관계자 30여 명이 참여하여 울무, 뿔 등 불법 사냥도구를 수거하였다.

과거 엽구 발견지점을 중심으로 야생동물 위협요인을 제거하고, 주변 쓰레기 수거와 밀렵·밀거래 방지를 위한 단속·홍보 활동을 병행하는 등 야생동물 서식지 보호를 위해 힘을 모았다.

아울러, 환경청은 야생동물의 포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청장 김호은)은 겨울철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방지대책의 일환으로 1월 21일 남원시 산내면 일대에서 불법엽구 수거행사를 개최했다

밀렵·밀거래 행위를 근절하고 범국민적 밀렵 신고 활성화를 위하여 '밀렵신고 포

상제도'를 운영중으로, 불법엽구 발견자는 환경신문고(국문없이 128), 전북지방환경청, 또는 관할 지자체, 경찰서로 신고할 수 있다.

신고자는 발견 위반행위에 따라 최대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적발된 밀렵·밀거래 행위자는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5천만원 이하의 벌금(상습자의 경우 7년 이하 징역)에 처해진다. 특히, 불법 엽구를 소지하거나 보관하는 경우도 처벌대상이 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호은 전북지방환경청장은 "밀렵·밀거래 우심지역을 대상으로 불법엽구 수거와 밀렵·밀거래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고 밝히며, "앞으로도 야생동물 보호와 밀렵·밀거래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농촌진흥청 식물성 단백질 소재 개발

대원공 활용 식물조직단백 제조 기술 개발 특허 출원

기후 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이 세계적 의제로 떠오르면서 식물성 단백질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식물성 단백질 식품의 핵심 원료인 분리대두단백*과 소재인 식물조직단백을 전량 수입에 의존해 국산화 기반이 미흡한 실정이다.

농촌진흥청(청장 이승돈)은 국산 콩 소비를 늘리기 위해 '대원공'을 활용한 식물조직단백 제조 기술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보통 식물조직단백은 수입 분리대두단백이나 탈지 대두에 글루텐 등 부재료를 섞어 제조한다.

이번에 개발한 기술은 국산 탈지대두와 쌀가루를 사용하며 글루텐을 넣지 않고도 고수분 식물조직단백을 만드는 것이 특징이다.

농촌진흥청 발효가공식품과 연구진은 탈지 대두를 주재료로 배합 비율과 압출성형 공정 조건을 최적화해 식감과 섬유조직이 우수한 '글루텐-프리 식물조직단백' 제조 방법을 개발해 2025년 12월 특허출원했다.

아울러 협업연구농장과 대량 생산 시스템에서 진행한 실증 평가에서 경도, 씹힘성, 탄력성 등 조직감과 조직화지수가 우수한 것을 확인했다. 또 탸너, 양념 묽음(닭갈비 맛), 건조포 등 시제품 3종도 개발했다.

/정소민 기자

농식품부, 2026년 139개 시·군 농촌공간계획 수립

'농식품부-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2026년 업무보고회' 개최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농식품부-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 2026년 업무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농촌공간계획이 성공적으로 전국 농촌지역에 정착하고, 제도 정착을 넘어 현장에서 가시적인 성과를 창출하는 단계로 도약하기 위해 마련됐다.

회의에는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으로 지정된 농어촌공사,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건축공간연구원과 관련 전문가가 함께 참석해 국민주권정부의 국정과제 이행, 농촌공간정책의 향후 추진방향 및 '26년 중점 추진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2024년 3월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도입된 농촌공간계획 제도는 그동안 중앙정부가 설계한 일률적인 개발 방식에서 벗어나, 시·군이 주도적으로 지역여건과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상향식 농촌공간계획을 수립하면 정부가 이를 통합 지원하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제도다.

시·군은 농촌공간계획을 지역 발전

의 '지도(地圖)'로 삼아, 주거·융복합산업·경관 등을 기능별로 구획하고 농촌특화지구*를 지정·육성하게 된다. 이를 통해, 주거환경 보호와 함께 생산 관련 시설 집적에 따른 생산 효율화 등을 기대할 수 있다. 현재 농촌지역 139개 시·군은 정주여건 개선 및 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농촌공간계획을 수립 중이다.

이번 회의에서 농식품부는 주거환경 개선, 축산·융복합산업의 집적화 등 현장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가시적인 공간정책 성과를 연내에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 전국 139개 시·군이 농촌공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시·군 주도로 농촌특화지구를 발굴,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는 계획이다.

또한, 농식품부와 중앙지원기관은 이번 업무보고회를 시작으로 정기적인 실무협의체 운영 등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농식품부가 국민주권정부의 농촌 정책으로 중점 추진하고 있는 모두의 행복농촌 프로젝트가 실질적으로 일터(소득기반)·살터(정주여건)·쉼터(농촌활력)로의 농촌을 구현할 수 있도록 협력 분야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덕진소방서 '화재예방순찰 노선 편성심의회' 개최

2026년 상반기 화재예방순찰 추진

전주덕진소방서는 화재 취약지역에 대한 선제적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시민 안전을 한층 높이기 위해 '2026년 상반기 화재예방순찰 노선편성 심의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심의회는 전통시장과 중점관리대상 등 화재 위험 요인이 상존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보다 효과적인 예방순찰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대응예방과장을 위원장으로 각 119안전센터장과 대응구조팀장이 참여해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였다.

심의회에서는 관내 화재 취약지역

의 특성과 위험 요소를 종합적으로 분석해 총 8개 노선, 83개소에 대한 예방순찰 노선을 심의·확정했다.

전주덕진소방서는 이번에 확정된 노선을 바탕으로 2026년 상반기 동안 각 119안전센터가 참여하는 체계적인 화재예방순찰을 추진할 계획이다.

예방순찰은 취약 시간대를 중심으로 하루 1회 이상 실시되며, 현장 점검과 안전 지도 활동을 통해 화재 위험 요인을 사전에 발굴·해소하는 데 주력하고, 지역 특성과 계절적 요인을 반영해 탄력적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완산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대상 겨울철 화재 대응 교육

전주완산소방서, 의용소방대원 대상 겨울철 화재 대응 교육

전주완산소방서는 겨울철 화재 위험이 급증하는 시기를 맞아 의용소방대원의 현장 대응능력 강화를 위한 전문 교육을 실시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교육은 전주완산의용소방대연합회 소속 대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으며, 겨울철 화재 발생 특성과 소화 원리, 초기 화재 대응요령, 화재진압 실무 중심 교육으로 구성돼 실질적인 현장 대응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었다.

이를 통해 대원들은 화재 특성에 따른 대응 방식의 차이를 이해하고, 초기 판단이 화재 확산을 막는 핵심 요

소임을 다시 한 번 인식하는 계기를 마련했다.

또한 실제 화재 현장에서 의용소방대원이 수행하게 되는 초기 진압 보조, 현장 안전관리, 주민 대피 유도 등 역할별 행동요령을 중심으로 한 실무교육도 함께 이뤄져 교육에 참여한 대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전주완산소방서는 이번 교육을 통해 의용소방대가 단순 지원 인력을 넘어 지역 안전을 지키는 생활 밀착형 재난 대응 인력으로서 역할을 더욱 공고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소민 기자

전문건설協 전북도회, 국토부장관에게 “호소”

7만 사업자들 “전문 건설업생존권” 위협 건설산업 정상화 촉구

최근 전국 7만여 전문건설사업자들은 현재 전문건설업생존권 위기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전달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내 전문건설사업자들은 전문건설업 생존권 수호 위한 탄원서를 작성해 포함시킬 예정이다.

지난 19일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북특별자치도회 임근홍 회장은 ‘제41회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제41회 정기총회’ 주요 목적에는 전문건설인 △생존권사수 △생존권수호 △권익보호 등을 담고있다.

임근홍 전문건설 전북자치도회장은 “건설산업 상호시장 진출에 의한 전문건설업 생존권 위협을 강력히 규탄하며 건설산업 정상화를 촉구”했다.

또 총회에 참석한 도내 전문건설인들은 현장의 최일선에서 오늘도 묵묵히 구슬땀을 흘리며 건설산업의 중심을 지켜가고 있다”며 “2026년 전문공사는 전문업체가 수행해야 한다는 굳건한 원칙 아래 우리 도회는 중앙회 윤학수 회장님을 중심으로 건설산업 생산체계 정상화에 협회 사활을 걸고 전문건설 권익보호와 위상 정립을 위해 주도적으로 앞장 서겠다”고 역설했다.

이어 협회는 “도내 전문건설인들과 영세 전문건설업체 생존권 수호 위한 건설업 상호시장 폐지에 대한 강력한 의사와



의지를 국토교통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건설공사에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면서 전문건설 시장에 종합건설업체가 무차별적으로 침입해 참여하게 돼 영세 전문업체는 존립기반이 상실되고 생존권마저 위협받는 상황에 처하게 됐다.

/김영태 기자

전북TP, 2026년 위드 토크데이 개최

미래성장동력 확보

(재)전북테크노파크(전북TP, 원장 이규택)가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및 경제활성화, 특별자치 실현 등 전북의 변화와 성장과 도출을 위한 지사님과 함께하는 ‘2026년 위드(With) 토크데이’를 20일 테크비즈센터에서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전북특별자치도 출범 2주년을 맞이해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가는 전북테크노파크를 비롯한 전북연구원, 자동차융합기술원, 전북바이오융합진흥원 등 7개 도내 출연기관 임직원들이 지역산업 활성화와 기업현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하기 위한 소통의 장으로써 마련됐다.

특히, 이번 행사는 현장에서 직접 기업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임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로 전북특별자치도의 미래 먹거리 산업인 방위산업과 반도체산업 등에 대한 산업육성전략을 공유하고, 기업지원 성과제고를 위한 실질적 전략에 관한 다양한 질의가 이루어져 전북의 구체적 산업생태계를 설계하는 뜻깊은 자리로 구성됐다.

또 공공의 본질과 책임을 다하는 임직원으로서의 마음가짐을 다잡고 빠르게 변화하는 환경에서도 기회를 찾고 혁신을 통해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마련했다고 전북TP는 밝혔다.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전북의 미래를 이끌어갈 산업 경쟁력은 현장의 목소리에서 시작된다”며, “출연기관 임직원 여러분의 전문성과 현장 중심의 고민이 더해져, 특별자치도 시대에 걸맞은 강한 경제 전북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규택 전북테크노파크 원장은 “이번 간담회는 지역산업과 경제를 이끌어 가는 주역들이 한자리에 모여 전북특별자치도의 한 단계 더 높은 도약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한 대 모아 실질적 성과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라며 “논의에 그치지 않고, 논의된 내용들이 기업들이 실질적인 혜택을 누리고 지역산업에 녹아들어 전북의 미래산업 경제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경진원 ‘2026 전북형 수출바우처’ 기업 모집

제조·유통 중소기업, 수출 관련 바우처 형태 지원

전북도내 중소기업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다.

전북특별자치도-전북특별자치도경제통상진흥원은 오는 30일까지 ‘2026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전북형 수출바우처’는 수출 규모에 따라 필요한 지원 서비스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바우처 형태 지원 사업이다.

특히 ‘전북형 수출바우처’는 지난해

2,556대 1의 높은 경쟁률을 기록하며 총 152만달러 상당 실적과 1354만달러 계약 성과를 거뒀다.

‘2026 전북형 수출바우처 지원사업’ 지원 대상은 도내 소재 제조·유통(도내 제품 수출)중소기업이다.

아울러 전년도 직수출 실적에 따라 △수출초보(50만불 미만) 기업은 최대 1300만원 △수출중력(50만불 이상) 기업은 최대 20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와 함께 경진원은 수출 장벽 해소 위한 ‘2026 해외규격인증 획득 지원사업’ 참여 기업도 모집 중이다.

참여기업에게는 인증비, 시험비, 컨설

팅 비용 등을 기업당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모집은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접수한다.

더불어 올해 경진원은 ‘전담 코디네이터’ 서비스를 운영해 △준비 △집행 △장비 단계까지 밀착 지원 등을 강화할 방침이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30일 오후 5시까지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jbexport.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북특별자치도 수출통합지원시스템 또는 경진원 수출전략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김영태 기자



“중소기업이 함께 ‘모두의 성장’을 구현한다!”

대중기업 상생 성장전략 발표

되고 기업 생태계 전반의 역량 강화로 이어질 필요가 있다.

아울러, 대기업의 해외투자 확대 등에 따른 수직형 남풍구조의 변동, 중소기업 기술탈취 등 불공정행위, AI·플랫폼 등 신산업 대전환 같은 환경 변화는 기존 상생협력 정책의 혁신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정부는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을 위해, 경제외교 성과의 직접적 공유·확산, 대→중소기업 환류 경로 강화, 상생 생태계 확장의 3대 전략을 마련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돼 모두의 성장이 구현되도록 유관 협·단체와 긴밀히 협조해 대책의 주요내용을 국민과 기업에 신속히 알리는 한편, 과제 추진 및 현장 안착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중소기업이 함께 ‘모두의 성장’을 구현한다!”

정부는 1월 21일 김윤철 경제부총리 주재로 개최된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대·중소기업 상생 성장전략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2026년 경제성장전략’ 후속 이행 방안으로, 대·중소기업이 성과를 공유하고 함께 성장하는 ‘모두의 성장’을 구현하기 위한 과제를 담고 있다.

지난해 국민 모두의 노력에 힘입어 한·미 관세협상이 성공적으로 타결됐고, UAE 순방, APEC 등에서 잇따라 괄목할 경제성과도 창출됐다.

이러한 경제외교 성과는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 협력업체와 정부가 함께 노력한 결과로, 이 같은 성과는 특정 기업을 넘어 중소·벤처기업까지 확산

국립종자원, 신품종보호 출원 1만4천건 넘어

14,284 품종…기후변화 바이오·소재 영역 확장

국립종자원(원장 양주필)은 식물 신품종보호제도가 1997년 12월 도입된 이래 2025년 12월 31일까지 547작물 14,284 품종이 출원됐다.

이 중 442개 작물 10,792품종이 보호 등록됐다고 발표했다. 이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80개 회원국 중 8위 수준이다.

식물 신품종보호제도는 신품종 육산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지식재산권의 한 형태로 육산자의 권리를 법적으로 보호함으로써, 우수품종개발을 촉진, 양질의 종자 보급을 확대함으로써 종자산업 경쟁력 강화와 농업 생산성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2025년 한 해 동안 출원은 115작물 525품종, 보호등록은 93작물 436품종

이다. 출원 비중은 화훼류가 245품종(47%)으로 가장 많았고, 채소류 137품종(26%), 과수류 68품종(13%), 식량작물 48품종(9%)이며, 출원이 가장 많았던 작물은 장미(58품종), 국화(39), 고추(24), 배추(22), 복숭아(17), 벼(17) 순이다.

보스톤고사리, 대마 등 8개 작물이 국내에 처음으로 출원됐으며 최근 반려식물, 생활원예에 대한 수요가 확대되면서 출원 작물도 다양해지고 있다. 또한 칸나베노이드 함량이 높은 대마 신품종이 신규 출원되고, 바이오 섬유소재로 사용되는 케나프(양마) 신품종이 출원되는 등 품종보호제도가 농업 생산 중심에서 바이오·소재 산업까지 그 영역이 확장되고 있다.

과수 분야에서는 블루베리와 포도의 외국품종 출원이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 최근 사인머스켓, 블랙사파이어 등 국내에 품종보호권이 설정되지 않은 외국 품종의 재배면적이 늘어남에 따라, 해외



육종가들이 권리 침해를 예방하고 안정적인 품종 관리를 위해 국내 출원을 강화한 움직임으로 분석된다.

이외 가뭄에 강하고 척박 토양에 잘 자라는 벼, 수직농장 재배에 적합한 고추 등 기후변화와 미래 농업환경에 대응한 품종의 출원도 꾸준히 이어지고 있다.

국립종자원 양주필 원장은 “국립종자원은 최근 출원 다양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스마트 재배실사 심사시설 구축 및 특수·기능성 형질에 대한 심사기준을 체계적으로 확대하는 등 품종보호제도의 심사 전문성을 높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지역 8개 기업 혁신제품 공공시장 진출

에너지안전·AI분야 ‘혁신 기술-공공현장 해법’ 인정

전북지방조달청(청장 김항수)은 기술혁신을 통해 공공문제 해결에 기여할 도내 기업 8개사 제품이 조달청 신규 혁신제품으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이번에 지정된 제품은 ▲수에너지 주식회사의 ‘상변화물질 리사이클링 탱크가 구비된 지열히트펌프’ ▲루미컴 주식회사의 ‘탄소섬유 하우징 적용된 LED보안등’ ▲주식회사 와파에이아이의 ‘3D 라이다를 활용한 AI 안전 관리 플랫폼’ ▲씨이에스 주식회사의 ‘도로 결빙 방지 시스템’ ▲신성이엔에스의 ‘거점식 축산차량 블로워 회전 분

무 소독 시스템’ ▲(주)쎌터테크놀로지

의 ‘장애에도 중단없는 방송이 되는 지능형 네트워크방송시스템’ ▲주식회사 프라임케미칼의 ‘초고온의 화재에 견디는 산업용 내화피복재’ ▲(주)성원안전의 ‘낙석방지 와이어넷 구조물’ 등이

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최대 6년간 수익계약을 포함해 시범구매, 우선구매, 구매면책 등의 다양한 혜택이 제공되며, 최근에는 R&D 연계, 해외실증, ODA 등 후속지원 범위도 대폭 확대되고 있다.

김항수 전북지방조달청장은 “이번 혁신제품 지정은 지역 기업의 기술력이 공공문제 해결 수단으로 공식 인정 받았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앞으로도 혁신기술이 실제 공공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실증과 판로 확대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은행 ‘JB 1·2·3 정기예금 특별금리 이벤트’ 시행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박춘원)이 JB 1·2·3 정기예금 가입고객을 대상으로 최고 연 3.1%의 금리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오는 3월 31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이벤트는 ‘JB 1·2·3 정기예금’ 가입 시 기본 금리 연 2.60%에 우대조건 충족 시 최대 연 0.5% 우대금리를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우대금리 조건은 최근 1년 간 전북은행 정기예금 보유이력 없는 첫 거래 고객 가입 시 0.4%, 마케팅 활동 동의 고객 0.1%이며, 복잡한 거래 실적이나 추가 상품 가입 없이, 첫 거래 여부와 마케팅

동의만으로 최고 금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가입금액은 최소 100만원부터 최대 5억원까지 전북은행 모바일앱 ‘썬뱅크’에서 가입 가능하며 1,000억원 판매한도로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다.

전북은행 관계자는 “금융소비자들이 금리 혜택을 중심으로 예금을 선택하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어 전북은행 이용 고객들에게 예금자산 운용에 혜택을 드리고자 이번 이벤트를 준비했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정읍시, 소나무재선충병 차단 위해 ‘합계나무주사 약제’ 배부

정읍시가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적기인 3월을 앞두고 예방 약제 지원에 나선다. 시는 오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통해 수요 조사를 마치고, 2월 중 약제 배부와 교육을 완료해 방어망을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소나무 반출금지구역(17개 동, 8개 면 37개 리) 내에서 0.1ha 이상의 소나무를 재배·관리하며 합계나무주사 방제를 희망하고 방제 명령을 받은 농가다.

지원되는 약제는 예방 효과가 입증된 ‘합계나무주사약’으로, 나무에 한 번 주입하면 약효가 최대 4년까지 지속돼 방제 효율이 매우 높다. 특히 시는 소나무재선충병 발생 지역인 고부면 일대 산림을 대상으로 수종 전환(80ha), 소구역 모두베기, 예방나무주사 등 방제작업을 실시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소나무재선충병은 선제적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약제 지원사업이 정읍 소나무의 건강성을 회복하는 마중물이 될 수 있도록 대상 농가의 적극적인 신청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4·5종 대기 배출 사업장 사물인터넷 측정기기 설치 지원

군산시가 4·5종 대기 배출 시설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 부차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21일 시는 대기환경 개선 및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규제 부담완화를 위해 총 4억 3,200만 원을 투입해 시설별 설치비의 60%를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는 2022년 5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법정 설치가 의무화됐으며 대기 배출 시설과 방지시설에 전류·온도·차압계 등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해 정상 가동 유무 등을 원격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대상은 군산시 소재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설치·운영중인 4·5종 대기배출사업장이다.

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최근 3년 이내 설치된 측정기기·5년 이내 정부 지원으로 설치된 측정기기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2월 5일까지 군산시 기후환경과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 자격, 사업절차,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시, 내달 20일까지

2027년 해양수산사업 신청 접수

군산시가 수산업·어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력 있는 어촌 조성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는 경쟁력 있는 수산업 육성과 어촌 활력 도모, 수산식품산업의 전략적 육성을 위해 오는 2월 20일까지 ‘2027년도 정부 지원 수산업·어촌·수산식품산업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 신청 대상 사업은 친환경 양식어업 육성, 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친환경 어구 보급, 어촌 발전 기반 조성, 수산식품산업 육성 등 해양·수산·어업·어촌 분야 정부지원사업이다.

신청 대상은 어업인, 어촌계, 영어조합법인, 어업회사법인, 수산물 식품가공업자 등 사업 지침에 지원 자격이 명시된 군산시민으로, 군산시청(어업정책과·수산산업과)을 방문해 신청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된 민간 지원사업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타당성 검토 등 자체 심의를 거쳐 정부 자금 지원 대상과 범위를 결정한 뒤, 전북특별자치도 및 해양수산부에 국가 예산을 신청할 계획이다.

시는 앞으로도 다양한 정부지원사업을 발굴하고 국가 예산을 확보해 수산업·어촌 및 식품산업 경쟁력 강화와 활력 있는 어촌 조성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혁신적인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해 어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어업 소득 증대와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로컬푸드 운영 중단 없도록”

기존 조합 재위탁은 불가…소농 수수료 면제 등 혜택 확대

익산시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시는 농업인의 소중한 판로가 막히는 최악의 운영중단 사태를 막기 위해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새로운 운영 주체로 하는 위탁동의안을 마련하고 시의회의 협조를 구하고 나섰다.

시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운영 중단을 막기 위한 긴급 대응책을 제시했다.

시는 기존 수탁자의 계약 위반에 따라 계약 해지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농가 피해를 최소화하는 유일한 해법은 공공성을 갖춘 전문 기관의 투입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시는 시의회와 시민사회가 요구한 조직 및 인적 쇄신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협동조합에 다시 위탁을 맡기는 것은 행정 원칙에 어긋난 뿐만 아니라, 부실 운영을 방치해 향후 더 큰 농가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시는 운영 공백을 제로화하기 위해 이미 로컬푸드직매장 모현점 운영을 통해



익산시가 운영 중단 위기에 처한 로컬푸드직매장 어양점의 정상화를 위해 모든 행정력을 집중하겠다고 발표했다.

전문성과 시스템이 검증된 (재)익산푸드통합지원센터를 구원투수로 내세웠다.

센터 위탁이 결정될 경우 어양점은 즉시 정상 가동되며, 농가에는 이전보다 파격적인 혜택이 주어진다.

연 매출 500만 원 미만 영세 소농에 대한 ‘판매 수수료 전액 면제’ 정책이 어양점에도 전격 도입되며, 중단 위기에 놓였던 택배비와 포장재 지원 사업도 안정적으로 재개될 전망이다.

현재 시는 직영 예산 삭감으로 인해 독자적인 직영 운영이 불가능한 상태다. 이에 시는 재단법인 위탁이 농업인을 보호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보고 시

의회의 대승적 결단을 요청했다.

이번 결정은 3선 임기를 마무리하는 정현율 시장의 ‘시민 중심, 현장 중심’ 철학에 따른 것으로, 행정의 투명성을 회복함과 동시에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경제적 이득이 돌아가게 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됐다.

익산시 관계자는 “농업인들의 땀과 눈물이 담긴 삶의 터전인 로컬푸드 어양점의 문이 닫히는 일은 결코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농민이 재배하고 익산시가 판매하는 적극 행정을 통해 지역 농업의 간간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14억 5천만원 투입 경로당 새 단장

362개소 대상 개보수 기능보강 사업 추진

정읍시가 지역 어르신들의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위해 총 14억 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관내 경로당 362개소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개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노후화된 경로당의 환경을 개선해 어르신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경로당 신축 1개소 △노후 정도와 이용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선정된 개보수 대상 182개소 △에어컨, TV, 냉장고 등 주요 가전제품과 비품의 기능 보강이 필요한 179개소 등 총 362개소다.

특히 시는 어르신들의 이용률이 높은 경로당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사업의 실효성을 높였다. 이를 위해 읍·면·동 단위의 수요 조사와 현장 확인 과정을 거쳐 최종 사업 대상지를 확정했다.

시는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정성과 효

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전 현장 확인을 강화하고 공사 진행 상황을 수시로 점검하는 등 행정적 관리에도 만전을 기할 방침이다.

이학수 시장은 “경로당은 지역 어르신들이 서로 소통하고 휴식을 취하는 매우 중요한 공간”이라며 “이번 사업을 통해 어르신들께서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여가 생활을 즐기실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히 살피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확정

총 37건·건 의액 491억 규모 신규사업 발굴

익산시가 지역발전의 자양분이 될 내년도 국가 예산 확보를 위해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다.

익산시는 21일 최재용 부시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2027년 국가예산 신규사업 37건(491억 원 규모)을 확정했다.

시는 지난해 9월부터 정부의 정책 방향을 면밀히 분석하고, 지역 발전의 동력이 될 신규사업 발굴에 집중해 왔다. 주요 발굴 사업은 △스마트농업 인공

지능센터 구축 △목련포천 풍수해생물권 종합정비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익산분원 설립 △K-메가복합 영상단지 등이다.

시는 신규 사업과 지난해 미반영된 사업 등 50대 중점사업을 선정해 본격적인 국가예산 확보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재난안전산업 진흥원 건립 △소상공인연수원 건립 △K-그린바이오 혁신 허브 △전북권 산재전문병원 건립사업 등 지난해 국회 최종 심사 단계에서 반영되지 못했던 사업도 논리를 강화해 2027년 예산 반영을 목표로 제

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시는 국가예산 확보를 위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역 정치권과의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부처 단계 예산 편성부터 기획예산처와 국회 심의까지 단계별 맞춤 전략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최재용 부시장은 “국가예산은 익산시의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며 “각 부서에서는 중앙부처, 전북특별자치도와의 긴밀한 소통을 바탕으로 부처 예산안 단계부터 우리시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시민주도 기본사회’ 이플 추진단 모집

시민 중심 상시 거버넌스 구성…25일까지 모집

군산시가 오는 25일까지 ‘기본사회’ 밀그림을 함께 그려 나갈 ‘군산시 기본사회 시민추진단’을 공개 모집한다.

이번 모집은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의 출발점으로 삼고 ‘기본사회’ 밀그림을 함께 그려 나갈 시민참여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추진된다.

기본사회 추진단은 △기본생활(주거·돌봄·의료) △교육·문화 △경제·환경(에너지·일자리) 등 3개 분과로 구성되며, 각 분과는 시민들의 욕구를 조사

하고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등 정책 형성 과정 전반에 주도적인 역할을 맡는다.

특히 시민 중심의 상시 거버넌스로 행정 주도의 정책 결정이 아닌, 시민이 직접 생활 속 기본권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지역 특성에 맞는 서비스를 제안하는 등 ‘정책 설계자’로 활약할 계획이다.

시는 시민추진단이 정책의 제안부터 점검, 평가까지 전 과정에 참여하는 만큼, ‘군산형 기본사회’가 시민의 손으로 직접 실현되는 토대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추진단원을 대상으로 ‘기본사

회 시민학교’도 운영할 예정이다.

‘시민학교’는 기본사회의 철학과 가치를 공유하고 지역사회 문제를 함께 고민하며 정책을 기획·제안할 수 있도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 프로그램으로, 단순 참여를 넘어 ‘기획형 시민 전문가’ 육성을 목표로 한다.

만 15세 이상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군산형 기본사회 시민 욕구 조사’도 실시할 방침이다. 모집 기간은 오는 25일 까지로 이메일(seh7048@korea.kr)로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군산시청 기획예산과(☎063-454-2708)로 문의하거나, 군산시청 누리집 고시공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97억 투입 ‘영농길’ 시원하게 뚫는다

20개 읍면동 321개소 정비

익산시가 2026년 영농철을 앞두고 농민들의 작업 편의를 높이고 안전한 영농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대적인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에 나선다.

익산시는 21일 브리핑을 통해 20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농로 포장, 농배수로 정비,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등 총 321개소에 97억 원(도비 16억 원·시비 81억 원)의 예산을 전격 투입한다고 밝혔다.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는 농민들의 영농 편의는 물론, 안정적인 삶의 터전을 마련하는 것과 직결되는 민생 사업이다.

시는 이번 사업이 완료되면 농촌 지역의 생활환경이 대폭 개선되는 것은 물론, 농작업의 효율성이 높아

져 실질적인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특히 이번 사업의 핵심은 ‘속도’다. 시는 농민들이 본격적인 농사를 시작하기 전 모든 공사를 완료해 영농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주요 사업 내용은 △농기계 이동을 원활하게 돕는 농로 포장 △용배수 처리를 원활하게 하는 농배수로 정비 △수리시설 개보수 등이다. 시 관계자는 “농민들이 걱정 없이 농사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농업 기반 시설 확충 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기 완공을 통해 시민 모두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사용 승낙 등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공무직노조 “상생과 협력 약속”

정읍시와 전국공무직노동조합이 8개월간의 긴 협상 끝에 노사 상생을 위한 합의점을 찾았다. 시는 21일 시청 시장실에서 2025년 공무직 단체협약을 체결하고, 근로 조건 개선과 복지 향상을 통해 대시민 행정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5월 13일 전국공무직노동조합(위원장 이권로)의 단체교섭 요구로 시작했다. 이후 양측은 약 8개월 동안 총 9차례의 실무교섭과 2차례의 본교섭을 진행하며 최종 합의에 이르렀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공무직 근로자의 실질적인 복지 증진과 근무 환경 개선에 중점을 뒀다. 구체적으로 △노동조

항 활동 여건 개선 △장기 재직 휴가 대상 기간 확대 등이 포함됐다. 이는 근로자들이 일과 생활의 균형을 찾고, 보다 안정적인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함이다.

시는 이번 노사 합의가 공무직 근로자들의 근무 만족도를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학수 시장은 “공무직 근로자는 시정의 동반자로서 청소, 환경, 시설 유지 등 곳곳에서 시민들의 안전과 편의를 증진시키는 큰 원동력”이라며 “앞으로도 노·사 협력 및 상생을 전제로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공무직 근로자와 상생하는 노사 관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스마트도시 조성 ‘시민참여 리빙랩’ 발대식

군산시가 21일, 시청 상황실에서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 시민참여 리빙랩 발대식’을 개최하고, 시민과 함께 하는 스마트도시 조성에 본격 착수했다.

이번 ‘시민참여 리빙랩’은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스마트도시 솔루션 확산사업의 하나로, 시민이 직접 도시문제를 발굴하고 스마트 솔루션의 기획·설계·검증 과정에 참여하는 협력형 정책 모델이다.

시는 작년 5월 본 사업 공모에 선정돼

총 24억 원의 사업비를 확보했다.

이날 발대식에서는 시민참여단 27명에 대한 위촉장 수여와 솔루션 구축을 위한 의견 수렴 및 토론이 이뤄졌다.

참석자들은 심도 있는 논의 속에 시민참여 리빙랩 운영계획과 참여단의 역할, 사업내용 등을 공유했다.

김영민 부시장은 “앞으로 시민 리빙랩을 통해 시민의 목소리가 실제 설계와 사업 운영에 반영되는 실질적인 참여 모델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밝혔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저소득층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지원

익산시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주거 환경을 조성하고자 공공임대아파트 임대보증금 무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익산시에 거주하거나 거주 예정인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전북개발공사가 공급하는 장기임대주택 신규 입주자다.

지원받을 수 있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6곳으로 △영구임대주택 2곳 △국민임대주택 12곳 △ 행복주택 2곳이다. 임대보증금은 세대당 최대 1,000만 원 범위에서 계약금을 제외한 금액을

최장 6년까지 무이자로 지원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경우 입주대상자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전북개발공사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익산시 주택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익산시 누리집www.iksan.go.kr에서 확인하거나 주택과(063-859-5549)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사업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의 임대보증금 마련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주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최준호 기자

완주군 ‘소상공인 경영애로해소단’ 가동

전문가사업장 방문 맞춤형 컨설팅
자금·디자인·마케팅 등 5개 분야
최대 5회까지 비용 군비 전액 지원

완주군이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 해소와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6년 경영애로해소단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컨설팅에 참여할 소상공인 10개사를 모집한다.

이번 사업은 경영환경 변화와 매출 부진, 마케팅·유통 전략 부족 등 다양한 애로를 겪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분야별 전문 컨설턴트가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1:1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하는 현장 밀착형 지원사업이다.

컨설팅은 △자금 및 공모·지원사업 △디자인 △마케팅 △유통 △상품화

및 기술 등 5개 분야로 진행되며, 소상공인이 겪는 주요 애로 사항에 맞춰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한다.

모집 대상은 완주군 소재 소상공인이며, 선정된 업체에는 자부담 없이 최대 5회까지 컨설팅 비용 전액을 군비로 지원한다. 다만, 사업자등록증 소재지가 완주군이 아닌 업체와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 국제·지방세 체납 기업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모집 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이며, 컨설팅 참여를 원하는 소상공인은 신청 서류를 작성해 이메일로 제출하면 된다. 접수 규모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다.

이번 지원사업은 지난해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한 것이다.

군은 2025년 기업애로해소단 운영사

업을 통해 관내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현장 중심의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했으며, 참여 업체들은 경영 전반에 대한 진단과 함께 정책자금·공모사업 선정, 마케팅 전략 수립 등에서 실질적인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 종료 후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도 다수의 참여 업체가 컨설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와 함께 재참여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조사됐다.

군은 이러한 운영 성과를 바탕으로 2026년에는 지원 대상을 소상공인으로 확대해 현장 수요 맞춤형 컨설팅 지원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김병수 완주경제센타장은 “소상공인이 겪고 있는 애로 사항을 현장에서 함께 해결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완주생강문화공간 시양’ 내달부터 본격 운영

전통농업 보존·체험 결합 거점
‘온돌식 생강굴’ 콘텐츠 선배

완주군은 ‘완주생강문화공간 시양’의 시범운영을 1월로 마무리하고, 오는 2월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

봉동읍 낙평리 일원에 조성된 ‘완주생강문화공간 시양’은 국가 중요농업유산인 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체험·교육·관광과 결합한 농업유산 거점 공간이다.

주요 시설로는 △생강을 테마로 한 실감형 미디어아트관 △농업유산 교육 및 체험을 위한 커뮤니티실 △다양한 생강 음료와 디저트를 즐길 수 있는 ‘시양카페’ 등을 갖췄다.

특히 전통 온돌식 생강굴을 리모델링해 보존한 ‘생강굴 보존주택’과 연계 운영해, 관람객이 농업유산의 현장을 체험할 수 있는 참여형 콘텐츠를 선보일 예정이다.

군은 본격 운영에 맞춰 시설물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전 연령대가 만족할 수 있는 쾌적하고 안전한 관람 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운영의 전문성과 현장성을 높이기 위한 지역사회 협력도 강화한다. (사)완주생강전통농업시스템 보존위원회, 사회적협동조합 녹원, 시니어클럽 등 지역 협력단체가 운영 과정에 참여해 농업유산 보존은 물론, 지역 일자리 창출과 세대 간 교류 확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완주생강문화공간 시양은 단순한 전시 시설을 넘어 완주 생강의 가치를 미래 세대에 전달하는 핵심 거점”이라며 “2026년 체계적인 운영을 통해 농업유산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적극적인 관광객 유치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경력단절여성 시간제 일자리 지원 나서

18~69세 미취업 여성 대상
참여기업 인건비 부담금 지원

순창군이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재진입을 돕기 위한 ‘시간제 일자리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에 인건비 일부를 지원함으로써 고용 부담을 덜고, 여성에게는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일자리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지원 대상은 순창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18세 이상 69세 이하의 미취업 여성으로, 혼인·출산·육아·가족 돌봄 등의 사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했던 경력단절여성이다. 이들은 주 15시간 이상 35시간 이하의 시간제 근무 형태로 신규 고용될 경우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에는 근로자의 급여 및 4대 보험 사업자 부담금의 50%를 1년간 지원하며, 신청일 기준 상시근로자 3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순창군 소재 기업이어야 한다.

단, 유형업소나 일용 인력공급업체, 고용보험 체납기업 등 일부 업종 및 조건에 해당하는 사업장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연중 상시 접수 가능하며, 참여를 원하는 기업이나 구직자는 순창군청 주민복지과를 방문하거나 이메일로 신청할 수 있다. 순창군은 기업체 설명회와 홈페이지 공고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에 나설 계획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마을세무사 6명 위촉 무료 세무 상담

제6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10년간 1,344건 상담 실적

완주군이 지난 20일 ‘제6기 마을세무사’ 위촉식을 열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6명을 위촉했다.

김재곤, 김건영, 김현순, 소창섭, 유희춘, 정원서 세무사로, 임기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이다.

마을세무사는 완주군 전 지역을 찾아가 영세사업자와 취약계층 등 세무 상담을 받기 어려운 주민에게 재능기부로 무료 세무 상담을 제공하는 제도다. 이를 통해 주민들의 절세를 돕고, 상담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생활 밀착형 세무 서비스 역할을 한다.

세무 상담은 재산세·취득세 등 지방세부터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국제까지 폭넓게 진행할 예정이다.



완주군은 20일 ‘제6기 마을세무사’ 위촉식을 열고 찾아가는 마을세무사 6명을 위촉했다. <사진=완주군>

찾아가는 마을세무사는 2016년부터 운영해 10년간 125회 읍·면 방문 상담을 이어왔으며, 전화상담 958건과 현장 상담 386건 등 총 1,344건의 상담 실적을 기록했다.

상담 희망자는 완주군청 재정관리과(290-2329) 및 각 읍·면사무소에 전화·팩스·이메일 등으로 상담 신청 가능하다. /완주=김명곤기자

남원시, 산림 36개 분야 일자리사업 추진

45억 투입 산림보호·재난 대응
200여명 선발 교육 병행

남원시는 2026년 산림자원의 체계적인 관리와 지역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업비 총 45억 원을 투입해 산림분야 일자리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산림의 공익적 가치 증진과 산림재난 예방·대응을 강화하는 동시에 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산림재난 대응단을 포함한 총 36개 사업에 202

일자리 사업분야로는 △산림재난대응단(60명), △산불감시원(80명), △숲가꾸기 패트롤(4명), △양묘장꽃묘생산(4명), △산림서비스도우미(3명), △합과우지방정원 관리인(1명) 등이다. 특히 시는 산불, 산사태, 산림병해충 3대 재난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산림재난대응단을 중점 운영한다. 참여자들에게 안전교육과 직무교육을 병행 실시해 현장 안전사고 예방과 전문성 향상에도 힘을 보탬다.

시 관계자는 “산림을 가꾸고 보호하는 동시에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중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남원시,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 최대 500만원 지원

64개소 내외의 시비 3억 2천 투입
총사업비 70% 범위 내 지원

남원시는 내수경기 침체와 고금리 기조 지속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쾌적한 영업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소상공인 상가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3억 2천만 원의 시비를 투입해 약 64개소 내외의 소상공인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가 내·외관 개선

및 필수 시설·설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남원시에 사업장을 두고 3년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으로, 총사업비의 70% 범위 내에서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내용은 △옥외간판 교체 △외부 도색 및 외벽공사, 차양막 설치 △내부 도배·도색·바닥·조명 공사 △화장실 개선 △냉·난방기 구입 등이며, 컴퓨터·가전·가구 등 자산 취득성 물품과 영업물품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 기간은 이달 20일부터 오는 2월

6일까지이며,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신청 후에는 재산세 납부액과 매출액, 사업 영위 기간, 거주 기간 등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상가환경 개선사업을 통해 소상공인의 경영 여건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동계 전지훈련 메카 부상…지역경제 활력

선수단 200여명 유치 상권 ‘특수’
악천후 대비·행정지원 등 호평

순창군이 동계 전지훈련팀을 유치하여 스포츠산업도시의 임지를 공고히 하고 침체된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현재 순창군에서는 수원 장안고 야구부(박건민 감독), 광주BC 야구단(신종길 감독), 소프트테니스 꿈나무선수단(강기영 감독), 경상대 소프트테니스팀(김도훈 감독)이 순창군을 찾아 구슬땀을 흘리며 동계 훈련에 한창이다.

여기에 아산시 유소년 야구단(황민호 감독), 한경대 소프트테니스팀(권영태 감독), 화성시청 소프트테니스팀(한우식 감독)이 차례로 순창을 찾아 동계 훈련캠프를 차릴 예정이다.

이번 동계 시즌 동안 7개 팀 200여명의 선수단이 참가하게 되며, 팀별로 적게는 7일부터 많게는 한 달 동안 순창에 머물러 숙박업소와 음식점 등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계 시즌 동안 7개 선수단이 팀별로 최소 7일 많게는 한 달 순창군에 머물면서 지역 상권에도 긍정적인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사진=순창군>

이처럼, 순창군이 전지훈련지로 주목받는 이유는 잘 갖춰진 스포츠 인프라에 있다. 특히 눈이나 비 등 악천후에도 훈련할 수 있도록 실내 시설이 마련돼 있다는 점이 큰 강점으로 꼽힌다.

또한, 실내 다목적구장에서는 소프트테니스팀이 날씨에 구애받지 않고 집중 훈련을 할 수 있으며, 야구 종목의 경우 실내 야구 연습장을 갖추고 있어 동계 훈련의 취약점을 효과적으로 보완하고 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노인복지회관 신축 ‘순항’…6월 준공 목표

노후 대한노인회 남원지회 철거
동일 부지에 52억 투입 재건축

남원시는 고령 인구 증가에 따른 복지 수요 확대에 대응하기 위해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1987년 준공된 (사)대한노인회 남원시지회 건물이 균열·누수, 엘리베이터 부재 등 노후화로 이용 불편이 커짐에 따라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동일 부지에 신축하는 사업이다. 부지는 기부채납으로 확보했으며, 202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와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을 거쳐 단계적으로 추진해 왔다. 시는 2025년 4월부터 본격 공사에 들어가 올해 6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이다.

노인복지회관은 동충동 394-4번지



남원시는 지난 2025년 4월 노인복지회관 건립 사업을 추진해 올해 6월 완공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사진은 투시도. <사진=남원시>

와 395-2번지 일원에 연면적 958㎡ 규모로 지하 1층~지상 2층으로 조성된다. 다목적실, 프로그램실, 대강당, 방송실, 사무실, 식당, 엘리베이터 등을 갖춘 복합 복지시설로 조성될 예정이다.

총사업비는 52억 5,600만원으로, 2023년도에 확보한 특별교부세 10억원

과 2025년도에 확보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 시비 32억 5,600만원이 투입된다. 남원시는 국·도비와 시비를 포함해 올해까지 사업 추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완주군의회, 지역 경로당 71곳 순회 방문 “새해 인사와 소통”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새해를 맞아 지역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 관내 경로당 순회 방문에 나섰다.

이번 순회는 1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총 10일간 진행되며, 봉동읍을 비롯한 관내 구만리, 신성리, 은하리, 성덕리, 고천리, 구암리 등 71개소 경로당을 직접 찾아가는 일정으로 마련됐다.

일정 첫날인 19일에는 구만리 건전 경로당을 시작으로 봉강, 구암, 서당 경로당과 신성리 일대 아파트 경로당을 차례로 방문해 어르신들과 새해 인사를 전하고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어 20일에는 낙평리 주공아파트 경로당과 신기, 신월 경로당 등을 방문해 동절기 시설 운영 상황을 점검하고, 어르신들의 건강과 생활 여건을 세심히 살폈다.

김 부의장은 이번 순회를 통해 경로당 이용 과정에서의 불편 사항과 마을별 숙원사업 등 다양한 현안과 건의 사항을 직접 청취하고 있다. 이후 일정은 제내리(22일), 율소리·은하리(23일), 장기리(27일), 둔산리(28일)를 거쳐 30일 성덕·고천·구암리 방문을 끝으로 마무리될 예정이다.

김재천 부의장은 “앞으로도 발로 뛰는 현장 중심 의정 활동을 통해 어르신이 존중받고 모두가 행복한 완주군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곤기자

순창군, 농기계 임대사업소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

순창군이 2026년에도 농업인의 영농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를 토요일까지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재, 군은 농업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가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본소, 서부권, 북흥·쌍치 권역에 임대사업소를 운영 중이며, 총 52기종 765대의 농기계를 보유해 농가 수요에 맞춘 임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장비 관리 역시 철저히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임대사업소는 총 6,368건의 농기계 임대 실적을 기록했다. 이와 함께 농작업 대행, 파쇄지원단 운영, 안전교육, 예초기 무상 수리 등 다양한 현장 중심 사업을 통해 약 64억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북흥·쌍치 권역 임대사업소는 총 2,097건의 임대 실적을 기록, 전체 실적의 약 32%를 차지하며 장비 접근성 향상과 농번기 대기시간 단축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군 관계자는 “농업기계 임대사업소는 농업인의 경영비를 절감하고, 인력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농업인이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비를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장애인 편의 확대 모바일 등록증 발급 서비스

남원시는 오늘부터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과 함께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발급 서비스가 전면 시행된다고 밝혔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스마트폰에 저장하여 사용할 수 있는 디지털 장애인 등록증으로, 기존 플라스틱 장애인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가진 전자 증명서다. 휴대가 간편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에서 실물 카드 대신 모바일 신분 및 장애 여부 확인할 수 있다.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은 발급 방식에 따라 절차가 구분된다. IC칩이 내장된 신규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은 경우, 핀번호 등록 후 본인이 스마트폰에 해당 앱(대한민국 모바일 신분증)을 설치 후 IC 등록증을 스마트폰에 태깅해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기존 실물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경우에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QR코드 인증을 통해 모바일 장애인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또한 스마트폰 교체 또는 분실 시에는 모바일 장애인등록증 기능이 자동으로 정지되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재발급이 가능하다.

/남원=정하복 기자



김경희 한국희망교육개발원장
고창군에 300만원 기탁

고창군과 인연을 맺은 한국희망교육개발원 김경희 원장이 지난 20일 고창군청을 찾아 300만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탁했다.

김경희 원장은 고향사랑기부제도가 시행된 이후로 2024년 200만원, 2025년 300만원에 이어 올해까지 3년간 고창군에 마음을 전달해왔다. 김경희 원장은 “고창은 저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닌 곳”이며 “이번 기부를 통해 내 마음속 고향, 고창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고 소감을 밝혔다.

고창군은 기탁받은 고향사랑기부금을 청소년, 취약계층, 지역 활력 증진 등 군민이 체감할 수 있는 다양한 기업사업에 투명하고 책임 있게 활용할 계획이다.

고창군수는 “고창을 내 마음속 고향으로 품고 따뜻한 나눔을 실천해 주신 기부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정성이 모여 고창은 오늘 기부와 함께 더욱 빛났다”며, “기부가 가진 의미를 높여, 기부의 가치를 올리는 고창을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진안군사회복지행정연구회
취약계층에 100만원 전달

진안군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21일 진안군에 이웃돕기 후원금 100만원을 전달했다.

진안군청 사회복지지킴이 공무원들의 모임인 진안군사회복지행정연구회는 지난 2015년부터 꾸준히 기부를 이어나가고 있다.

이번 전달식에는 김대환 사회복지과장과 진안군사회복지행정연구회 회장(윤안순)이 참석해 “회원들이 지역 사회에 나눔 실천하겠다는 뜻을 모아 이번 후원을 결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전달된 후원금을 관내 취약계층을 위한 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될 예정으로,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한편, 진안군은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미원상사, 완주군 아동 위해 1억 1천여만원 쾌척

근로자들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정성 담겨

완주군 관내 기업인 ㈜미원상사(전주1·2공장)와 ㈜미원스페셜티 케미칼 전주공장 임직원들이 지역 사회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따뜻한 나눔을 실천했다.

21일 ㈜미원상사 전주공장 관계자들은 유희대 완주군수를 찾아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금 전달식’을 가졌다.

이날 전달된 후원금은 총 1억 1,235만 원으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관내 저소득가정

아동 51명에게 1년간 매월 정기적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특히 이번 후원금은 기업의 기부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해 모은 정성이 담겨 의미를 더했다.

해당 기업의 나눔 행보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년간 꾸준히 후원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2023년 3,470만 원, 2024년 3,370만 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6,695만 원을 기부하는 등 현재까지 총 1억 3,535만 원을 지역사회에 환원했다.

/완주=김명곤 기자



지난 21일 ㈜미원상사 전주공장 관계자들은 유희대 완주군수를 찾아 저소득가정 아동 후원 전달식을 가졌다

NH농협 정읍시지부, 고향사랑기부금 1300만원 전달

주민들 복지 향상에 기여

NH농협 정읍시지부가 정읍시의 발전과 고향사랑기부금 활성화를 위해 뜻깊은 나눔을 실천했다.

정읍시는 21일 시청에서 이학수 시장과 NH농협 장길환 전북본부장과 김순기 정읍시지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탁식을 갖고, 1300만원의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이번 기부금은 정읍 지역의 고향

사랑기부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주민들의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정읍시지부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뜻이 이뤄졌다.

김순기 지부장은 “고향사랑기부제는 지역발전은 물론 공동체를 활성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정읍시지부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힘을 합쳐 기부의 시작을 알리게 돼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이리평화새마을금고, 익산시에 성금 500만원 전달

익산시 평화동에 설명절을 앞두고 이웃을 위한 따뜻한 나눔이 전달됐다.

이리평화새마을금고(이사장 엄양섭)는 21일 평화동 행정복지센터를 찾아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날 전달된 성금은 익산시 자원봉사센터(센터장 강태순)로 지정기탁돼 ‘설명절 나눔보따리’ 사업에 사용될 예정이다.

설명절 나눔보따리 사업은 자원봉사단체와 읍면동 행정복지센

터가 함께 참여해 장애인과 독거 어르신,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300세대에 명절 물품을 전달하는 사업이다.

익산시자원봉사센터는 2011년부터 매년 설·추석 명절 나눔보따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개인과 기업의 후원을 통해 마련된 물품으로 이웃 간의 정을 나누고, 지역 사회 나눔 문화 확산에 힘쓰고 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 경암동 지사협, 장수 어르신 생일파티 진행

군산시 경암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21일 저소득 장수 어르신을 대상으로 생일파티 지원사업인 ‘장수의 기쁨, 함께해孝!’ 사업을 진행해 새해를 따뜻하게 시작했다. 이번 사업은 매월 생일을 맞은 저소득 장수 어르신 가정을 지역 사회보장협의체 위원들이 직접 방문해 정성껏 준비한 생일상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는 사업이다.

생일상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생각지도 못한 생일 축하를 받아 정말 기쁘다”라며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이진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작은 정성에도 환하게 웃으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오히려 더 큰 보람을 느낀다”라며, “앞으로도 지역 이웃을 세심하게 살피는 다양한 나눔 활동을 통해 정이 있는 마음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장수 천천면 이장협의회
이웃돕기 성금 100만원 기탁

장수군 천천면은 지난 20일 이장협의회는 천천면사무소를 방문해 관내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한 성금 100만 원을 기탁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성금은 경기 침체와 물가 상승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과 사회적 고립 위험에 놓인 이웃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기탁된 성금은 장수군 천천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추진하는 특화사업 등에 활용돼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취약계층의 생활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전망이다.

천천면 이장협의회는 각 마을 이장들로 구성된 지역 대표 조직으로, 평소에도 주민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가교 역할은 물론 지역 화합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봉사활동과 나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이번 성금 기탁은 지역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는 이장들이 뜻을 함께해 마련한 나눔으로, 이웃들에게 따뜻한 위로와 온정을 전했다.

/장수=최진수 기자



대한적십자사 전북자치도지사
취약계층 630세대에 난방텐트 지원

대한적십자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는 겨울철 혹한기에 대비해 전북도내 재난취약계층 630가구에 난방텐트를 전달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난방비 부담이 큰 수해가정 등 취약계층의 겨울철 생활 안정을 돕고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난방텐트는 실내 체감 온도를 높여 에너지 비용 상승에 따른 난방 부담을 완화하는 데 활용된다.

난방텐트는 전북 도민들이 기탁한 적십자 성금으로 마련됐으며 적십자 봉사원이 각 가정을 직접 방문해 전달 후 현장에서 설치해 도우며 대상자의 건강 상태를 함께 확인했다.

난방텐트를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집 안에 텐트를 설치해주니 바람도 덜 들어오고 훨씬 따뜻해질 것 같아 옮겨올을 걱정을 덜었다”고 전했다.

/정혜민 기자

겨울철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4가지방법

수도계량기가 얼었다면? 수도계량기가 얼었다면 드라이기로 약하게(50도 미만) 설정후 녹여 주는 방법이 좋아요

수도계량기 보호통 내 보온재를 잘넣고 뚜껑을 밀폐

1.

옥외 화장실, 외부에 노출된 배관에 보온재를 꼼꼼히 묶기

2.

장시간 외출시, 수도물을 매우 약하게 틀기

3.

동파방지열선 구매해서 활용하는것도 예방에 도움

4.

〈一事一言〉



현장에서 답을 찾는 전북형 친기업 행정

김관춘

주필

전북자치도가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1기업-1공무원 전담제’가 단순한 기업 지원 정책을 넘어, 행정과 기업의 관계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제도로 자리 잡고 있다. 과거 행정이 기업 위에 존재하며 규제와 허가의 주체로 인식됐다면, 이 전담제는 공무원이 먼저 현장을 찾아가 기업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동반자 모델을 정착시켰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제도 출범 3년여 만에 누적 애로사항 5,641건 접수, 실질 해소율 78.2%라는 수치는 전북형 친기업 행정이 결코 구호에 그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 제도의 핵심 경쟁력은 ‘상시성’과 ‘현장성’이다. 전북도와 14개 시군이 도내 2,797개 기업과 전담 공무원을 1대1로 매칭해 월 1회 현장 방문, 주 1회 유선 소통을 원칙으로 삼은 것은 행정의 리듬을 기업의 호흡에 맞춘 과감한 전환이다.

기업 입장에서선 민원이 생길 때마다 담당 부서를 찾아 해매지 않아도 되고, 공무원 입장에서는 기업 경영 전반을 이해한 상태에서 보다 정교한 행정 지원이 가능해졌다.

인력, 환경·안전, 판로, 자금 등 애로 유형이 고르게 분포돼 있다는 점은 기업의 어려움이 특정 분야에 국한되지 않고 복합적으로 얹혀 있음을 보여주며, 그만큼 전담 공무원의 역할이 단순 중계가 아닌 종합 코디네이터로 확장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소율이 해마다 상승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대목이다. 2023

년 54.6%에서 2024년 61.5%, 2025년 73.4%로 꾸준히 높아진 것은 제도가 안정화되며 기업과 행정 간 신뢰가 축적된 결과다.

특히 시군 단위로 제도가 확산되면서 교통 안전시설 설치나 환경 정비, 단순 제도 문의 같은 생활 밀착형 애로가 늘어난 현상은, 기업들이 행정의 문턱을 낮게 느끼기 시작했다는 긍정적인 신호다. 이는 통계상의 성과를 넘어, 기업 생태계 전반에 신뢰 자본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실제 성과 사례들은 전담제가 왜 필요한지를 더욱 분명하게 보여준다. 새만금산단에서 전력 공급 문제로 공장 가동을 걱정하던 기업이 전담 공무원의 끈질긴 협의로 정상적인 전력 공급 방안을 마련했고, 원료 수급에 어려움을 겪던 기업은 도내 농가와의 계약 재배로 경영 안정과 지역 상생을 동시에 이뤘다.

해외 이전을 검토하던 기업이 행정의 신속한 용도 변경과 밀착 지원으로 도내 투자를 결정한 사례는, 이 제도가 투자 유치의 결정적 변수로 작동할 수 있음을 잘 보여준다. 시군 차원에서도 폐수 처리시설 설치, 산업단지 주차난 해소, 인허가 지연 문제 해결 등 현장 맞춤형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제도가 ‘특정 시기 성과 사업’으로 소비되지 않도록 제도적 내구성을 높이는 일이다. 민선 8기의 대표 정책으로 자리 잡은 만큼, 향후 행정 환경 변화나 인사 이동 속에서도 일관되게 작동할 수 있는 표준 매뉴얼과 운영 원칙

을 정립해야 한다.

전담 공무원이 바뀌더라도 기업과의 관계, 누적된 애로사항, 해결 과정이 단절되지 않도록 기록 관리와 인수인계 체계를 더욱 촘촘히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기업 규모와 성장 단계에 따라 지원 방식에 차등을 두는 세분화 전략도 요구된다. 초기 창업기업과 중견·중소기업, 대기업 투자 유치 대상 기업의 애로는 성격이 다르기 때문이다.

아울러 1기업-1공무원 전담제를 지역 인재 육성, 산학연 협력, 금융 지원 정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시도도 필요하다. 기업 현장에서 수집되는 인력 수요와 기술 과제를 대학, 연구기관, 금융기관과 연결한다면 단순 애로 해소를 넘어 지역 산업 생태계 전반을 업그레이드하는 촉매제가 될 수 있다. 전담제가 ‘문제 해결 창구’에서 ‘성장 동반 플랫폼’으로 진화해야 하는 이유다.

전북자치도가 이 제도를 통해 쌓아 온 현장 행정의 경험과 신뢰를 보다 큰 정책 혁신으로 확장해 나갈 때, 전북형 친기업 행정은 전국 지방정부의 모범 사례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 더해 이제 과제는 이 성과를 어떻게 지속 가능하게 확장하느냐다. 우선 전담 공무원의 전문성과 권한을 함께 강화할 필요가 있다. 기업 애로가 고도화될수록 단순 전달자로는 한계가 있다. 산업별 이해, 재정·법제에 대한 기본 역량을 체계적으로 높이고, 부서 간 협업을 이룰 수 있는 조정 권한을 실질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이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애로사항을 정책으로 환류하는 구조를 더 정교화해야 한다.

인력난, 환경 규제, 판로 문제처럼 구조적 성격을 띤 과제는 개별 해결을 넘어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때 비로소 기업 체감도가 높아진다.

그리고 전담제의 성과를 데이터로 축적·분석해 선제 행정으로 발전시켜야 한다. 단순히 ‘문제를 해결하는 행정’에서 나아가,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는 행정’으로 진화할 때 이 제도의 가치는 배가된다.

끝으로, 전담 공무원에 대한 조직 내부의 평가와 보상 체계도 함께 고민해야 한다. 현장 행정의 성과가 공무원의 경력과 동기 부여로 연결될 때 제도는 형식이 아닌 문화로 뿌리내릴 수 있다.

‘1기업-1공무원 전담제’는 행정이 기업을 살피는 방식을 바꾼 실험이자,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실질적인 경제 정책 중 하나다. 공무원이 먼저 찾아가 작은 불편부터 경영의 큰 방향까지 함께 고민하는 이 전북형 모델이 더욱 고도화될 때, 전북은 기업이 머무르고 투자하고 싶은 지역으로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행정경계를 넘은 결단, 혁신도시 악취 잡는다

전북혁신도시를 둘러싼 악취 문제 해결을 위해 전북자치도와 전주·김제·시·완주군 등 4개 자치단체가 한뜻으로 뭉쳤다.

행정구역의 경계를 넘어 공동의 문제를 공동의 책임으로 풀어가겠다는 이번 협력은 지역 현안을 해결하는 새로운 상생 모델로서 의미가 크다. 주민 삶의 질을 저해해 온 환경 문제 앞에서 ‘우리 구역의 일’과 ‘남의 지역 문제’를 가르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눈길을 끈다.

이번에 체결된 혁신도시 악취 해결 업무협약의 핵심은 재원 분담과 역할 분담의 명확화다. 김제시 용지면 특별관리지역에 남아 있는 현업축사 27농가를 매입·철거하는 데 총 340억 원을 투입하고, 이 가운데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102억 원을 전북도와 3개 시군이 나눠 부담하기로 했다.

사업 대상지가 김제시에 위치해 있지만, 악취 피해를 함께 겪어온 전주시와 완주군이 비용을 분담하는 구조는 전국적으로도 찾아보기 힘든 협력 사례다. 이는 환경 문제의 영향권이 행정 경계와 일치하지 않는다는 현실을 정확히 인식한 결과다.

그동안 혁신도시 주민들은 지속적인 악취로 일상에 불편을 겪어 왔다. 1단계 축사 매입 사업 이후 복합악취 농도가 절반 가까이 줄어드는 성과가 있었지만, 민원이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다. 잔여 축사 전량 매입과 체계적인 관리가 병행돼야 근본적 해결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번 2단계 사업은 선택이 아닌 필수다.

도가 협의·조정과 국비 확보, 성과 점검을 맡고, 김제시는 사업 시행과 관리 강화를 담당하며, 전주시와 완주군이

연계 사업에 협력하는 역할 분담 또한 실효성을 높이는 대목이다.

무엇보다 이번 협약은 ‘환경’이라는 공공의 가치를 중심으로 자치단체 간 이해관계를 조정해 낸 모범 사례다. 각자의 재정 여건과 행정 부담을 이유로 책임을 미루기 쉬운 상황에서,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공동 목표에 합의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받아 마땅하다. 이러한 협력 방식은 악취 문제를 넘어 교통, 수질, 산업단지 환경 등 다른 광역 생활권 현안으로 확산될 수 있다.

아울러 이번 협약이 일회성 사업에 그치지 않기 위해서는 지속 가능한 협의체 운영과 주민과의 소통 강화가 병행돼야 한다. 악취 문제는 단순한 시설 철거만으로 끝나는 사안이 아니라, 축산 환경 관리와 지역 개발 정책 전반을 함께 고민해야 할 과제이기 때문이다. 주민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사업 진행 과정과 성과를 투명하게 공개할 때 신뢰는 더욱 공고해질 것이다.

이러한 신뢰를 토대로 한 협력 행정이야말로 전북이 지향하는 ‘특별자치’의 실질적 모습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약속의 이행이다. 계획된 일정에 맞춰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악취관리지역 지정과 사후 관리까지 빈틈없이 이어져야 한다.

오랜 시간 불편을 감내해 온 혁신도시 인근 주민들에게 이번 협력이 체감 가능한 변화로 이어질 때, 행정구역을 넘은 상생은 구호가 아닌 정책 모델로 자리 잡을 것이다.

전북에서 시작된 이 협력의 경험은 다른 지역에도 전파돼, 지역 발전과 환경 개선을 동시에 이루는 새로운 기준이 되기를 기대한다.

오늘의시

눈 맞는 대밭에서 / 황지우

단식 7일째
도랑 뒤편 눈 맞는 대밭에
어이없이 한동안 서 있다
창자 같은 강도를 뚫고
난 지금 박장을 막 관통한 것이다
눈 맞는 대밭은 만 세상이 이 세상 같다
눈덩이를 이기지 못한 땃가지 우에
다시 눈이 사각사각 쌓이고 있다
여기가 이 세상의 끝일까
몸을 느끼지 못하겠다
내 죽음에 아무런 판단을
걸어놓지 않은 이런 순간에
어서 그것이 왔으면 좋겠다
미안하지만, 후련한 죽음이

시인 약력 : 1952년 전남 해남 출생. 서울대학교 미학과를 졸업했다. 1980년 중앙일보 신춘문예에 입선하고 ‘문학과지성’에 시를 발표하며 등단했다. 한국예술종합학교 연극원 극작과 교수와 총장을 역임했다. 시집으로 ‘새들도 세상을 뜨는구나’ ‘겨울-나무로부터 봄-나무로’ ‘나는 너다’ ‘개 눈송의 연꽃’ ‘저물면서 빛나는 바다’ 등이 있다. 제3회 김수영문학상과 제36회 현대문학상, 2006년 육관문화훈장 등을 수상했다.

丨성명丨

신천지예수교회 성명서

정부가 특정 종교를 지목해 ‘해악’과 ‘폐해’를 단정적으로 언급하며 공권력을 앞세워 대응에 나선 것은, 대한민국 헌법 제20조가 보장하는 종교의 자유와 정교분리 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이러 한 국가 권력의 일방적 규정과 개입에 깊은 우려를 표하며, 헌법 정신에 입각한 공정하고 절제된 국정 운영을 강력히 촉구한다.

지난 1월 12일, 이재명 대통령은 종교 지도자들과의 간담회에서 특정 종교를 언급하며 “사회에 끼치는 해악을 오래 방치해 폐해가 크다”고 발언했다.

이어 13일 김민석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서 특정 종교를 전제로 ‘사이비’, ‘이단’이라는 표현과 함께 합동 수사 및 근절 방안을 지시했다. 이는 수사가 개시되기도 전에 결론을 전제한 발언으로, 행정부 수반이 특정 종교를 사회적 문제 집단으로 규정한 것처럼 비쳐질 수밖에 없다.

정부는 스스로 지시한 합동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특정 종교를 전제로 ‘사이비’, ‘이단’, ‘해악’을 확인하며 헌법적 경계를 노골적으로 무너뜨리고 있다.

도대체 누가 정부에게 종교를 규정하고 심판할 권한을 부여했는가? 최고 권력자가 수사 가이

드라인을 제시하며 사법 독립성을 훼손하는 근거는 무엇인가?

정통과 이단의 기준은 권력과 의 유착 여부나 정치적 이해관계가 아닌, 오직 ‘성경’이어야 한다. 역사는 반복되어 왔다. 조림 당시 예수님 역시 기성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고 핍박받았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예수님은 이단이 아닌 정통 신앙의 중심이 되었다. 오늘날에도 성경의 내용이 아니라 교세의 크기나 일부 목회자들의 주장에 따라 신앙 단체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현실이 과연 정당한가.

이러한 문제의식 속에서 신천지예수교회는 수차례 공개적으로 제안해 왔다. 이단 시비를 가리기 위해 감정이나 여론이 아닌, 성경을 기준으로 대중 앞에서 공개적인 성경 시험을 치르자고 말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공정한 응답은 아직 없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스스로 완전 무결하다고 주장한 적이 없다. 만일 교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지적해 주기를 바란다.

잘못이 있다면 고칠 의지가 있으며, 실제로 그러한 자세를 견지해 왔다. 우리는 성경적 가르침을 바탕으로 사회적으로도 반듯한

신앙인이 되고자 노력해 왔고, 국가와 사회에 필요한 존재가 되기 위해 협조를 아끼지 않았다. 국가가 재난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나섰고, 취약계층을 돕는 봉사에 참여했으며, 혈액 수급 위기 때는 헌혈로 사회적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악’이라는 추상적 표현만 반복될 뿐, 구체적인 피해 사실은 제시되지 않고 있다.

그동안 신천지를 향한 수많은 고소·고발이 있었지만, 사법 절차를 통해 무혐의 또는 무죄 판단이 반복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새로운 혐의가 덧씌워지고, 사회적 비난의 대상으로 소비되고 있다. 법적 판단이 이미 내려진 사안조차 정치적·여론적 공격의 재료로 재생산되는 것이 과연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모습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대통령과 정치권은 특정 집단을 희생양 삼는 정치가 아니라, 국민 전체를 위한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 종교를 정치적 위기관리의 도구로 삼거나, 다수 여론에 기대 소수 종교를 압박하는 방식은 국가 발전에도, 민주주의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모든 국민의 대통령이어야 하며, 국가를 특정 신앙을 배제하거나 차별하지 않을 의무가 있다.

오늘 한 종교가 표적이 된다면, 내일은 또 다른 종교와 시민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신천지예수교회는 헌법이 보장한 종교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 침묵하지 않을 것이며, 동시에 법과 질서 안에서 진실과 신앙으로 이 문제를 바로 세우고자 한다. 정부는 감정적 규정이 아닌 사실과 법에 근거해 판단해야 하며, 국민을 위한 정치, 국가 발전을 위한 국정 운영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신천지예수교회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지금까지도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며 많은 봉사를 했고, 헌혈로 국민의 생명을 살리는데도 앞장서왔다. 우리는 지금껏 그래왔듯 앞으로도 하나님과 예수님을 믿는 종교인으로서, 이 나라 국민으로서의 본분을 다할 것이다.

2026년 1월 19일
신천지예수교회 성도 일동

본란의 외부 기고는 본지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가까이, 열린 의정, 으뜸 의회’ 구현을 표방하며 씩 없이 달려온 제9대 임실군의회가 임기의 마지막 페이지를 준비하는 시점에 섰다.

장종민 의장을 필두로 한 제9대 후반기 의회는 지난 1년, 책상이 아닌 현장에서 답을 찾으며 군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승화시키는 데 매진했다. 임기 종료를 6개월여 앞둔 지금, 의회와 집행부를 ‘군민의 삶을 함께 책임지는 두 바퀴 수레’로 정의하고 달려온 제9대 의회의 2025년 성과와 ‘아름다운 마무리’를 위한 다짐을 조명해 본다.

〈편집자주〉

제9대 임실군의의회 2025년 결산

‘한 걸음 더 가까이, 열린 의정, 으뜸 의회’

● 장종민 의장 “운동화 끈 조여 매고 달린 1년… 초심 잃지 않을 것”



“2025년 한 해를 마무리하며 우리 제9대 임실군의회는 이제 임기의 마지막 6개월이라는 소중한 시간을 마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7월, ‘군민 중심의 의회’를 만들겠다는 포부로 시작했던 여정이 어느덧 대단원의 막을 내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장종민 의장(사진)은 지난 1년을 회고하며 ‘현장’과 ‘책임’을 강조했다. 그는 “올해 초, 지혜와 변화를 상징하는 뱀의 해를 맞아 군민 여러분께 약속드렸던 ‘길상여의(吉祥如意)’, 즉 모든 일이 길하고 군민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임실을 만들기 위해 우리 의원 전원은 운동화 끈을 조여 매고 현장을 누볐다”며 “지방의회의는 주민의 대표자가 집행부를 감시하는 기관을 넘어, 지역의 미래를 설계하는 입법기관이라는 무거운 책임감을 한순간도 잊지 않았다”고 밝혔다.

돌이켜보면 올 한 해는 ‘2025 임실 방문의 해’를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한 인프라 구축부터, 송전선로 건설 반대와 같은 군민의 생존권이 걸린 현안까지 격동의 시간이었다. 장 의장은 “이러한 과제 해결을 위해 집행부와 ‘두 바퀴 수레’처럼 발을 맞췄다”며 “수레의 두 바퀴가 나란히 굴러가야 앞으로 나아갈 수 있듯, 때로는 견제와 비판으로 균형을 잡고 때로는 협력과 지원으로 속도를 높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제 남은 6개월은 새로운 사업을 벌이기보다는, 그동안 추진해온 사업들이 군민의 삶 속에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꼼꼼하게 점검하고 마무리하는 ‘결실의 시간’으로 삼겠다”고 덧붙였다.

● 운영행정위원회: 발로 뛰는 현장 의정, 대안 제시하는 정책 의회

운영행정위원회(위원장 김종규)는 지난 한 해, 군민의 삶과 직결된 조례 제·개정부터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다각적인 건의·결의 활동, 그리고 전문성을 더한 연구 활동까지 숨 가쁜 일정을 소화하며 의회의 심장부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

■ 90여 건 안전 처리… 군민 실생활 입법 주도
운영행정위원회는 제9대 의회 전반기와 후반기를 잇는 가교로서 내실 있는 회기 운영에 집중했다. 지난 1년여간 조례안과 예산안, 동의안 등 총 90여 건에 달하는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며 입법 기관으로서의 본분에 충신했다.

■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강력한 목소리’
지역의 생존권과 자존심이 걸린 문제 앞에서는 그 누구보다 단호했다. 위원회는 △지역사랑상품권 국비 지원 촉구 건의안을 시작으로 △육군 제6탄약장 토지 보상 문제 재조명 및 개발행위허가 규제 완화 촉구 건의안 △신정읍-신계동 초고압 송전선로 건설사업 전면 재검토 촉구 결의안 등을 잇따라 채택하며 정부와 관계 기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강력히 요구했다.

또한,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유치 약속 이행을 위한 △임진제강 임실 제2농공단지 투자협약 이행 촉구 결의

안과 △에코시티 개발이익금 정산 촉구 결의안을 주도하며 지역 이익 수호에 앞장섰다. 아울러 △일본 사도광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진상규명 및 역사적 책임 이행 촉구 건의문을 통해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국제적 정의 실현에도 목소리를 높였다.

■ ‘공부하는 의회’… 연구단체 및 벤치마킹 활발
‘공부하고 연구하는 의회’로의 체질 개선도 눈에 띈다. 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임실 인구유입 정책연구회 △임실 균형발전 연구회 △임실 지명바로세우기 연구회 등 3개의 의원 연구단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실효성 있는 정책 대안 발굴에 매진했다.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 또한 돋보였다. 순창군 농촌유학 거주시설, 곡성세계장미축제, 고창 정보리밭 축제 등 타 지자체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스마트팜 선도 기업인 지티팜을 방문하는 등 임실군 실정에 맞는 관광·농업 정책 접목을 위해 현장을 누볐다.

● 농업복지위원회: 농업의 미래 여는 실용 의정, 소외 없는 촘촘한 복지 의회

농업복지위원회(위원장 김정흠)는 임실군의 근간 산업인 농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소외되는 이웃 없는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지난 1년을 온전히 쏟았다.



현장의 절박한 목소리를 정책으로 녹여내며 ‘군민의 삶을 지키는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자처했다는 평가다.

■ 70여 건 안전 처리… 군민 삶을 챙기는 ‘세심한 입법’
농업복지위원회는 군민의 생활과 직결된 조례 제·개정 등 입법 활동에 매진했다. 지난 1년간 조례안과 동의안 등 총 70여 건의 안건을 심도 있게 처리하며 민생 안정을 최우선 과제로 삼았다. 단순히 안전을 처리하는 데 그치지 않고, 농업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복지 혜택이 군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는 데 의정 역량을 집중했다.

■ 농민 생존권 사수… 건의·결의안 채택
기후 위기와 물가 상승으로 이중고를 겪는 농민들을 대변하기 위한 목소리는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 위원회는 △쌀값 폭락 방지 및 가격안정 대책 마련 촉구 건의안 △벼 재배면적 조정제 철폐 촉구 건의안 △필수농자재 국

가 지원 법률 제정 촉구 건의안 등을 채택했다. 이는 관계 당국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호소하며 지역 농업의 생존권을 지키기 위한 위원회의 단호한 의지를 보여준 대목이다.

■ ‘농어촌 기본소득’ 실현을 위한 치열한 고민과 현장 행보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유치를 위해 위원회가 보여준 열정과 노력은 남달랐다. 위원회는 이 사업이 소멸 위기에 처한 농촌을 살릴 수 있는 실질적 대안이라 판단, 집행부에 적극적인 검토와 추진을 주문하는 한편 주민들과의 연대에도 온 힘을 쏟았다.

비록 당장의 가시적 성과로 이어지지는 못했으나, 정책의 필요성을 지역 사회에 공론화하고 현장의 절박함을 알리기 위해 주민과 함께 발로 뛰었던 지난 과정은 그 자체로 의미 있는 의정 기록으로 남았다는 평가다.

■ 연구단체 가동… 정책 전문성 강화
전문성을 갖춘 정책 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연구 활동도 활발했다. 소속 의원들은 △임실 그린 연구회 △임실 지역농업발전 연구회 △임실 교통복지 연구회 △임실 사회·복지정책 연구회 등 4개의 연구단체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다. 이를 통해 농업뿐만 아니라 환경, 교통, 사회복지 등 다양한 분야의 현안을 심층적으로 파고들며 실효성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며,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일방통행식 사업 추진에 제동을 걸었다.

■ 민·관·정 공조 체계 구축… 입체적 대응 로드맵 가동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 마련에도 공을 들였다. 특위는 임실군 송전탑 대책위원회 및 관계 공무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문가 특강을 통해 논리를 보강하는 등 치밀한 활동 계획을 모색했다.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군정의 맥(脈) 짚는 ‘송곳 검증’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일윤)는 지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의 일정을 통해 군정 전반을 꼼꼼히 되짚어보며 군민의 눈높이에서 행정을 진단했다. 위원회는 본청은 물론 직속기관, 사업소, 읍·면, 그리고 출자·출연기관까지 감사의 범위를 넓혀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주요 사업의 추진 현황을 면밀히 파헤쳤다.

그 결과 채택된 결과보고서에는 총 127건(시정 19건, 처리 29건, 건의 79건)에 달하는 대대적인 개선사항이 담겼다. 이는 단순한 지적이나 질타에 그치지 않고, 행정의 사각지대를 찾아내고 합리적인 대안까지 제시한 정책 감사의 결과물이다. 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각적인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불합리한 제도는 건의를 통해 근본적인 개선을 유도했다.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재정 건전성 확보한 ‘알뜰 살림’ 설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재)는 대내외적인 경제 불확실성과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 속에서,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책임감을 안고 2026년도 예산안 심사에 임했다. 위원회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최우선 원칙으로 세우고, 관행적으로 편성된 예산이나 불요불급한 낭비성 요인을 찾아내 과감히 삭감하는 등 군민의 소중한 혈세가 허투루 쓰이지 않도록 현미경 심사를 진행했다.

치열한 계수조정과 심도 있는 논의 끝에 확정된 2026년도 임실군 살림 규모는 총 5,229억 원이다. 위원회는 한정된 재원이지만 ‘선택과 집중’을 통해 농업 경쟁력 강화, 취약계층 보호, 지역 경제 활성화 등 군민의 피부에 와닿는 필수 사업에는 과감한 투자를 아끼지 않았다.

동시에 행사성 경비나 소모성 예산은 철저히 배제하여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예결위는 이번 예산안 확정을 통해 재정 위기 속에서도 임실군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군민 복지 증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 ‘균형 잡힌 예산’을 완성했다는 평을 듣고 있다.

● 2026년 ‘5,229억 예산 시대’… 유종의 미로 보답하겠습니다.

의회는 성과에 대한 자족보다는 욕심나 놓친 부분은 없는지, 군민의 기대를 저버린 부분은 없었는지를 먼저 되돌아보며 한 해를 출발하고 있다.

2026년도 본예산 5,229억 원이 최종 확정됐다. 예산안 임기 마지막 날까지 낭비 없이 쓰이고, 그리고 다음 의회가 더 나은 토대 위에서 시작할 수 있도록 정갈히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다는 각오다.

2026년 상반기는 제9대 의회의 지난 4년을 집대성하는 시기가 될 전망이다. 의회는 의장단과 의원들이 약속했던 ‘의회 방송 개설’부터 ‘읍·면 순회간담회’까지, 모든 공약 사항들을 끝까지 추적하고 관리할 방침이다.

의회와 집행부리는 두 바퀴 수레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 서로의 속도를 맞추며 마지막 목적지를 향해 정진하겠다는 것이다.

/임실=한병열 기자